

# 한국경제 긴급진단과 향후 정책과제

일시 : 2012. 6. 21 (목) 10:30 ~ 13:00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신관) 2층 회의실

주최 : 여의도연구소 (새누리당)



# || 목 차 ||

## ■ 개최 배경

## ■ 진행 순서

## ■ 주제 발표 : 현오석 (KDI 원장)

『 한국경제 긴급진단과 향후 정책과제 』 ..... 5

## ■ 지정 토론

I. 경제운용 부문 : 신제윤 (기획재정부 제1차관) ..... 43

II. 통화·거시 부문 : 김준일 (한국은행 부총재보) ..... 47

III. 금융안정 부문 :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 55

IV. 국제금융 부문 : 박원암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 69

V. 민생안정 부문 : 김종수 (중앙일보 논설위원) ..... 73

VI. 부동산/가계부채 부문 : 김광수 (김광수경제연구소 소장) ..... 79

# “한국경제 긴급진단과 향후 정책과제”

## 개최 배경

- 유럽의 재정위기가 확산되면서, 경제위기 가능성에 대한 우려 증가 추세
  - 업계에서는 경기침체의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 비상계획 수립 중
  -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강만수 산업은행 회장 등 정부 일각에서도 대공황 이후 가장 큰 경제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
- 유럽발 금융위기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서민경제를 튼튼히 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새누리당은 정부에 누치에 걸쳐 촉구한 바 있음.
  - 황우여 당대표 및 이한구 원내대표 발언 (최고위원회의), 2012.06.07 및 06.18
- 이에 따라 여의도연구소에서는 정책토론회를 개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
  - 국내외 경제상황에 대한 긴급 진단을 기반으로, 위험 요인을 사전적으로 예방함으로써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선제적 정책 대응조치를 모색
- 여연 주최 국회토론회의 발표자는 다음과 같음
  - 발제 :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 토론 : 신제윤 (기획재정부 제1차관)      경제운용 부문  
         김준일 (한국은행 부총재보)      통화·거시 부문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금융안정 부문  
         박원암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국제금융 부문  
         김종수 (중앙일보 논설위원)      민생안정 부문  
         김광수 (김광수경제연구소 소장)      부동산/가계부채 부문
- 국회토론회 결과는 하반기 경제운용 관련 당·정 협의 자료로 활용
  - 6월 28-29일 경 정부는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발표할 예정

여의도연구소장 / 국회의원 김광림

# “한국경제 긴급진단과 향후 정책과제”

## 진행 순서

개 회 식	국민의례	10 : 30	
	내빈소개	10 : 35	사회자(홍지만 의원)
	인 사	10 : 45	김광림 여의도연구소장
	축 사	10 : 50	이한구 원내대표
			김석동 금융위원장
	축 영 하 상	11 : 00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이혜훈 최고위원
			심재철 최고위원
			정우택 최고위원
			유기준 최고위원
김진선 최고위원			
이정현 최고위원			
※사 회: 홍지만 국회의원			
토 론 회	발 제	11 : 10	현오석 KDI 원장
	토 론	11 : 30	신제윤 기획재정부 제1차관
			김준일 한국은행 부총재보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박원암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김종수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광수 김광수경제연구소 소장
	12 : 30	질의 & 응답	
	13 : 00	폐 회	
※진 행: 김광림 여의도연구소장			



# “한국경제 긴급진단과 향후 정책과제”

## ❖ 주제 발표 ❖



현오석 (KDI 원장)

### [ 학 력 ]

1984.05	미국 펜실베니아대학교 대학원 졸업 (경제학 박사)
1976.02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행정학 석사)
1974.02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졸업 (경영학 학사)

### [ 경 력 ]

2008.09 – 2009.03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
2008.03 – 2008.12	공공기관 (공기업 · 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장
2002.04 – 2008.05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원장
1996.01 – 1999.11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 예산심의관, 세무대학장 外
1989.09 – 1991.08	세계은행 (World Bank) Economist

도미니카공화국 감사훈장(2011), 산업포장(2010), 녹조근정훈장(19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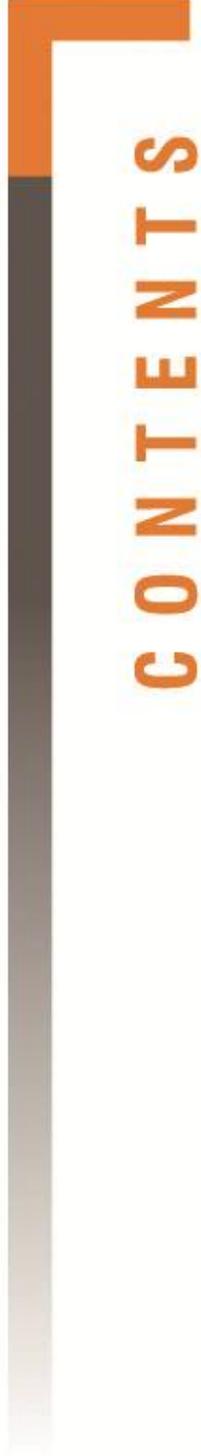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 주최 공개토론회  
2012. 6. 21. 10:30-13:00  
국회 의원회관(신관) 2층 소회의실

# 한국경제 긴급진단과 향후 정책과제

현 오 석

Korea's Leading Think Tank **KDI**



# CONTENTS

유럽 재정위기의 현황과 전망

유럽 재정위기의 영향

2012년 국내경제 전망과 경제운영 방향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점

중장기 경제·사회정책의 핵심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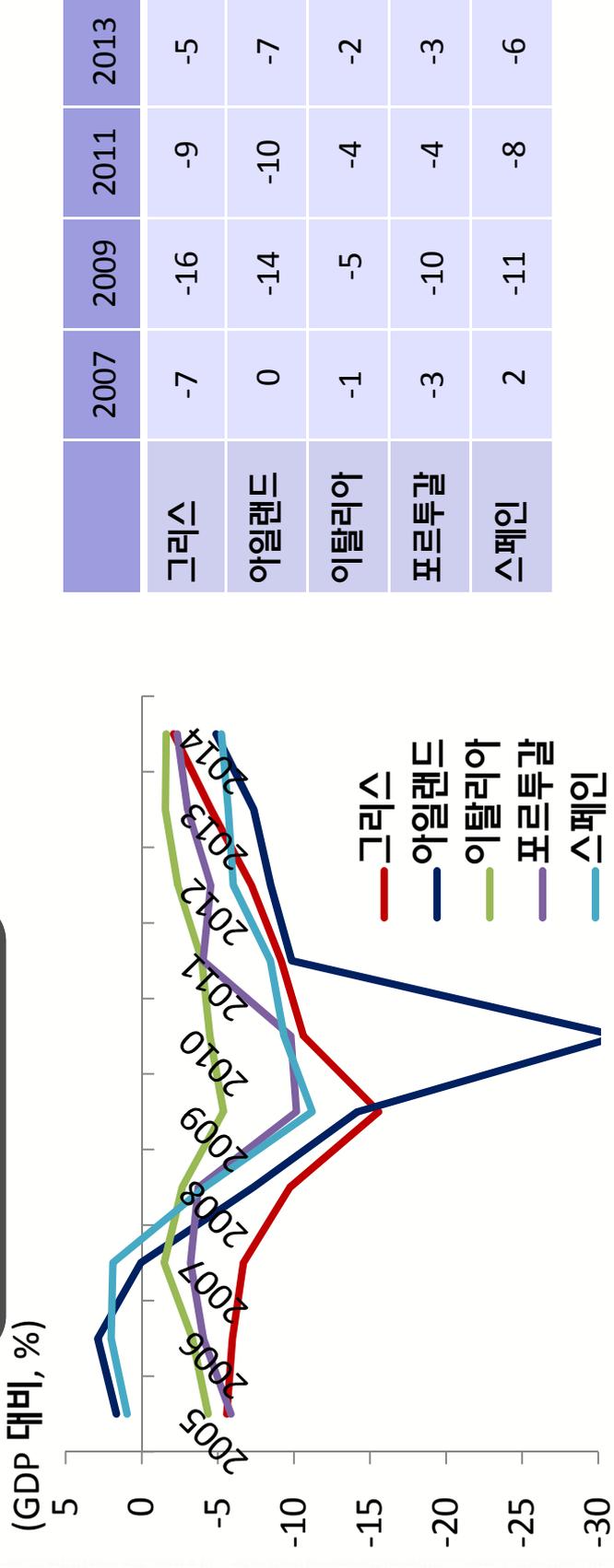


# 유럽 재정위기의 현황과 전망

■ 각국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고강도의 재정긴축을 추진 중

- 그리스의 경우 2009-2011년의 2년간 재정수지가 GDP 대비 6%p 개선
  - 경기요인을 감안한 구조적 재정수지(structural balance)로는 11%p 개선

## GIIPS 국가의 재정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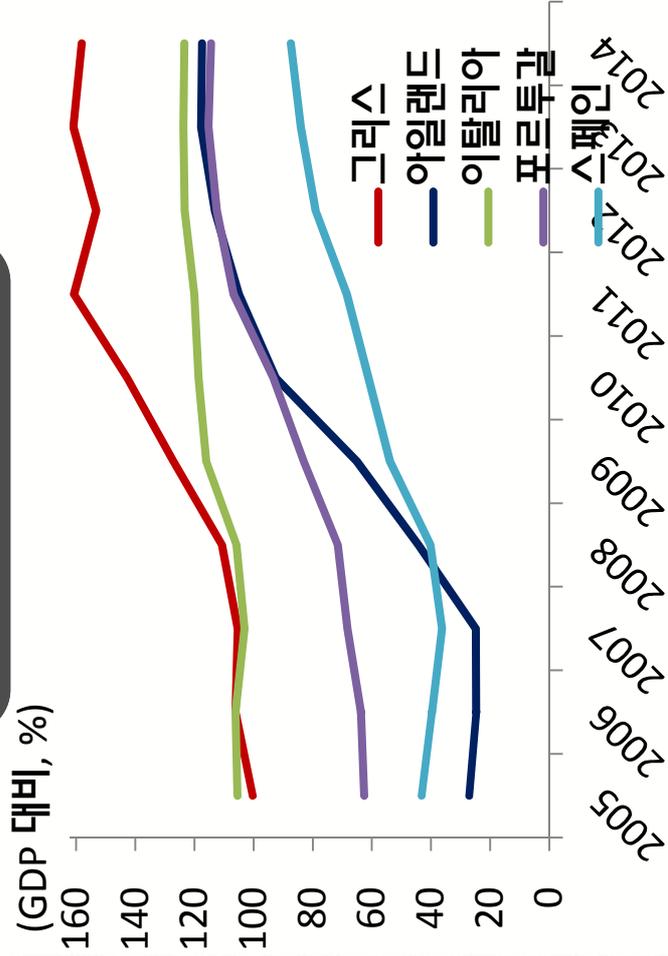


주: 2012년 이후는 전망.  
자료: IMF.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안정화에 성공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

- 그리스는 부채조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정부부채/GDP 비율이 161%로 전망
- 여타 국가의 부채비율도 상승 추세 지속

### GIIPS 국가의 정부부채



주: 2012년 이후는 전망.  
자료: IMF.

# 그리스: 정치적 혼란과 경기침체



■ 악순환: 정치적 혼란 → 불확실성 증대  
 → 경기침체 가속화 → 정치적 혼란

● 불확실성 증대를 반영, 지난 2년간  
 예금잔고가가 약 1/3 감소

● 성장률: 2011년 -6.9%, 2012년  
 4.7% (최근 5년간 총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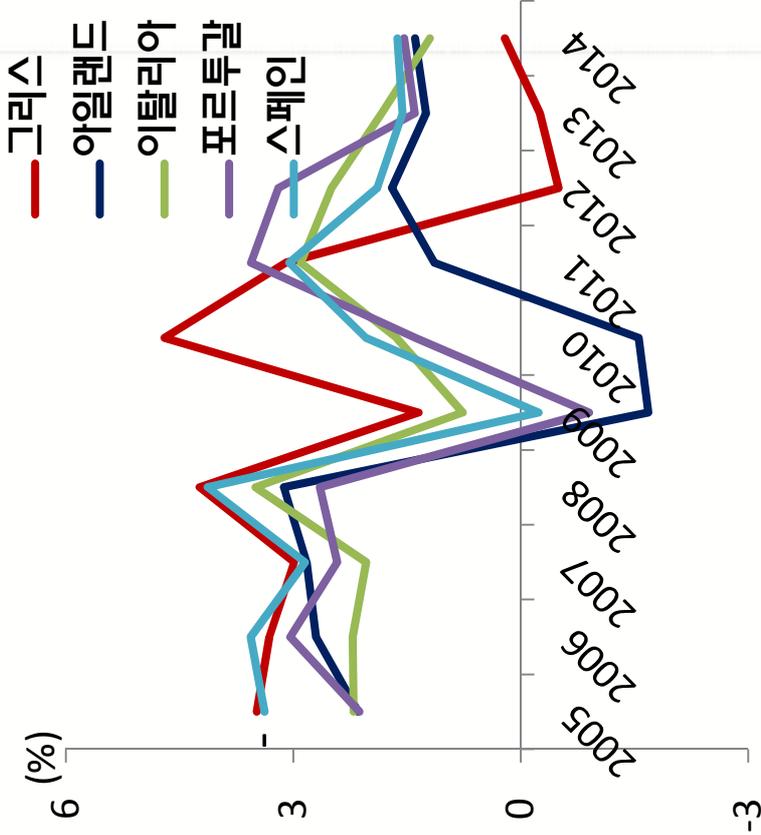
■ 임금 및 물가의 하락도 더디게 진행,  
 경쟁력 회복 지연

● 경상수지 적자/GDP: 2011년 10%

■ 최근 총선에서 우파의 신민주당이  
 승리하였으나 어려움 지속

● 2030년까지 부채비율을 60%로 낮추기  
 위한 구조적 기초수지 개선폭: GDP 대비 7%p

GIIPS 국가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주: 2012년 이후는 전망.  
 자료: IMF.

## 스페인: 1천억 유로의 자금지원에도 불구하고 불안 지속 [KDI]

### ■ 부동산 거품의 규모가 막대

- 건설 및 부동산 대출(GDP 대비): 1992년 10% → 2009년 43%
- 주택가격은 2007-2008년 대비 25% 하락하였으나 50%까지도 하락 가능

### ■ 문제의 핵심인 비상장 저축은행(Caja)은 우리나라와 같이 불투명한 지배구조로 인해 구조조정에 저항할 가능성

- 구제금융 조건으로 저축은행들은 이사회 개편, 대기업 지분 매각 등을 강요받을 전망

### ■ 민간수요 부진

- 24%에 달하는 실업률, 은행들의 위험회피적 대출행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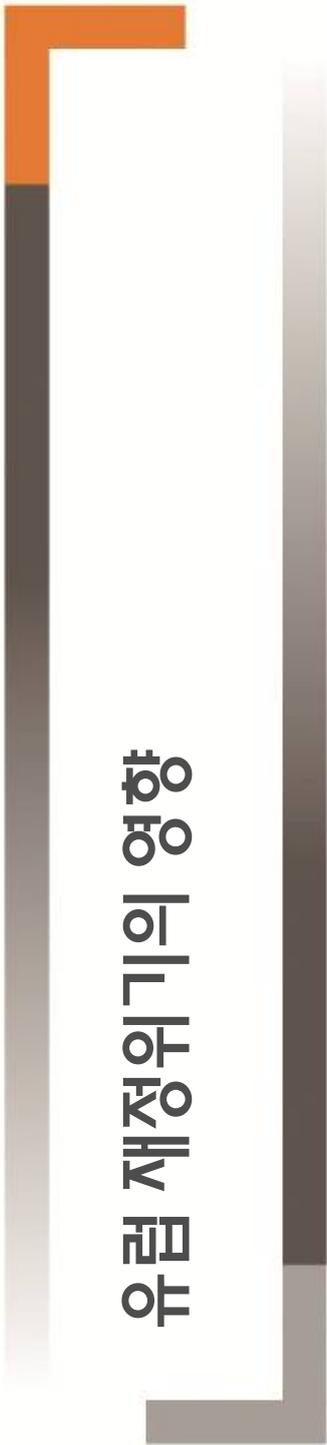
### ■ 재정도 불안

- 구제금융이 실현되면 정부부채가 GDP 대비 8-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지방정부의 막대한 재정적자 지속

## 이탈리아: 경기침체 지속

KDI

- 재정적자가 작고 부동산 거품이 문제되지는 않으나, 수년간 경기침체 지속
  - 정치적 안정도 확신할 수 없는 상태
    - 비정치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현 정부(Mario Monti)의 구조개혁 노력 지체
    - 9개월 후에 시행될 차기 총선의 결과에 대한 불안감 지속
  - 정부부채 규모가 막대한 이탈리아가 위기에 처할 경우 대처방법이 제한
    - 정부부채는 2조 유로에 달하는 데 비해,
    - 스페인 구제금융 이후 추가적인 구제금융 가용재원은 4천억 유로에 불과



유류 재정위기의 영향

- EU의 실물경제가 추가로 위축될 경우 세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 EU의 비중(2011): 세계 GDP의 28%, 세계 교역량의 33%
- 그러나 EU의 역내교역 비중이 높아 경기침체는 역외보다 역내에 주로 영향
  - 역내교역 비중: EU 65%, 동아시아(한, 중, 일, 홍콩) 31%, 북미(미, 캐, 멕) 40%
- 한국의 對EU 수출비중(10%)이 낮아 직접적 수출감소 규모는 작을 전망(KDI)
  - EU 경제성장률이 2012-2013년 중 -1.0%p 하락할 경우
  - 對EU 수출은 2012년 5%, 2013년 9% 감소하고,
  - 전체 수출은 1% 미만 감소할 것으로 추정
- 한국의 對중국 수출이 줄어들 가능성
  - 한국의 對중국 수출 가운데 68%가 가공무역·보세가공
  - 중국의 對EU 수출은 17%

- 한국의 對EU 부채(2,358억달러)는 전체 대외부채의 28%로서 높은 편(2011)
  - 특히 이동성이 높은 부채성 증권과 기타 투자가 각각 507억 달러 및 305억 달러
- 그러나 對한국 투자가 많은 영국의 은행권은 비교적 안정된 모습
  - 영국 은행의 對한국 투자는 916억 달러로 전체 유럽은행의 59%를 차지
  - 그러나 영국 은행은 유럽 재정위기 국가에 대한 익스포저가 낮은 편
    - 그리스 및 스페인에 대한 투자는 전체 유럽은행의 11% 및 14%에 불과
  - 또한 영국은 2008년 이후 은행부문의 구조조정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제고
- 반면 유럽 재정위기 국가들에 대한 투자가 많은 프랑스와 독일의 은행들은 對한국 투자가 많지 않음.
  - 프랑스와 독일 은행들의 對한국 투자규모는 373억달러로서 영국(916억달러), 미국(882억달러), 일본(470억달러) 등에 비해 미미한 수준

■ 유럽 재정위기 심화에 따라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전반적으로 둔화될 경우, 유럽경제의 부진 자체보다 더 큰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무역경로를 통해 유럽의 경기침체가 여타 지역으로 전파
- 금융시장 불안이 다른 지역으로 파급되어 신흥시장국에서 자본이 유출

■ IMF는 무질서한 디폴트(disorderly default)가 발생할 경우 아시아 신흥시장국의 성장은 0.1-0.4%p 하락할 것으로 전망

## 유로 존 위기가 GDP에 미치는 영향

	微震 시나리오		强震 시나리오	
	2011	2012	2011	2012
전 세계	-0.2	-0.1	-0.4	-0.5
미국	-0.2	-0.2	-0.7	-0.7
유로	-0.4	-0.2	-1.4	-1.3
일본	0.0	-0.1	-0.1	-0.4
NIAE	-0.1	-0.1	-0.3	-0.4

주: '강진(earthquake)' 시나리오는 2007년 글로벌 경제위기 시의 충격과 동일한 규모의 충격이 발생할 것으로 가정, '미진(tremor)' 시나리오는 1/2 규모의 충격을 가정.

자료: IMF,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유럽 재정위기와 한국경제," 2012. 4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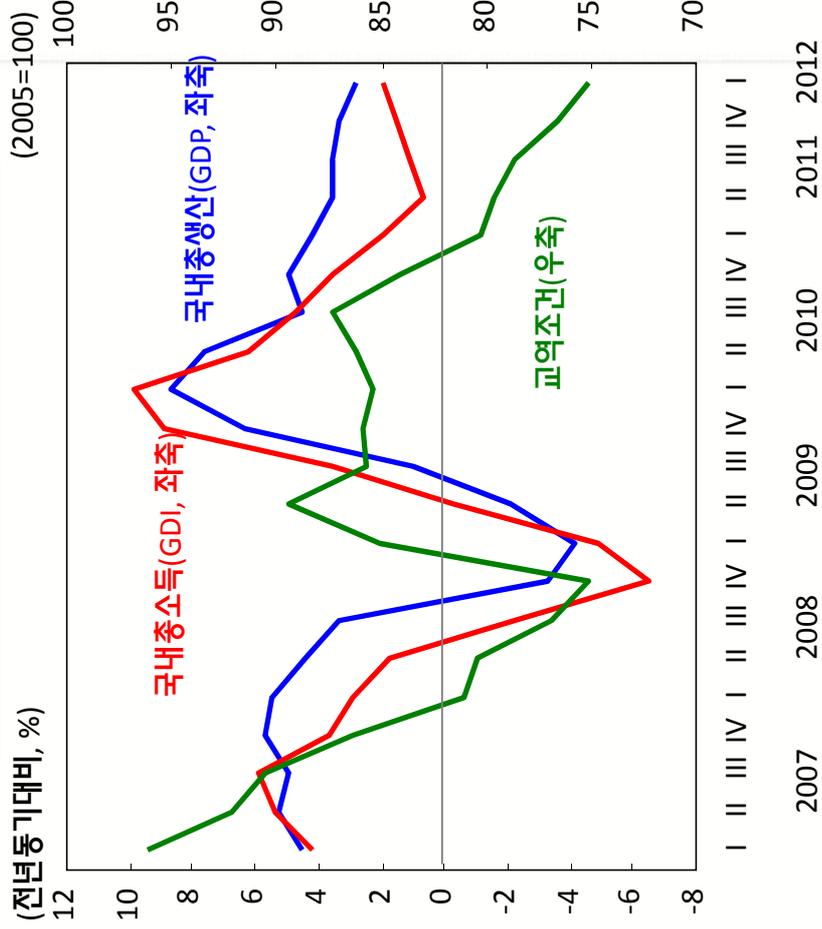
2012년 경제전망과 경제운영방향

# 최근의 경기동향

■ 세계경제 불확실성에  
기인하여 대내외 수요가  
전반적으로 약화되면서 작년  
하반기 이후 경기둔화가  
지속되는 모습

- GDP 성장률은 작년 1/4분기 4.2%를 기록한 이후 4분기 연속 둔화추세를 지속하며 금년 1/4분기 2.8%를 기록
- 물가상승 및 교역조건 악화에 따른 소득(실질구매력) 둔화 등에도 기인

국내총생산 및 국내총소득 증가율



주: 교역조건=(수출단가지수/수입단가지수)\*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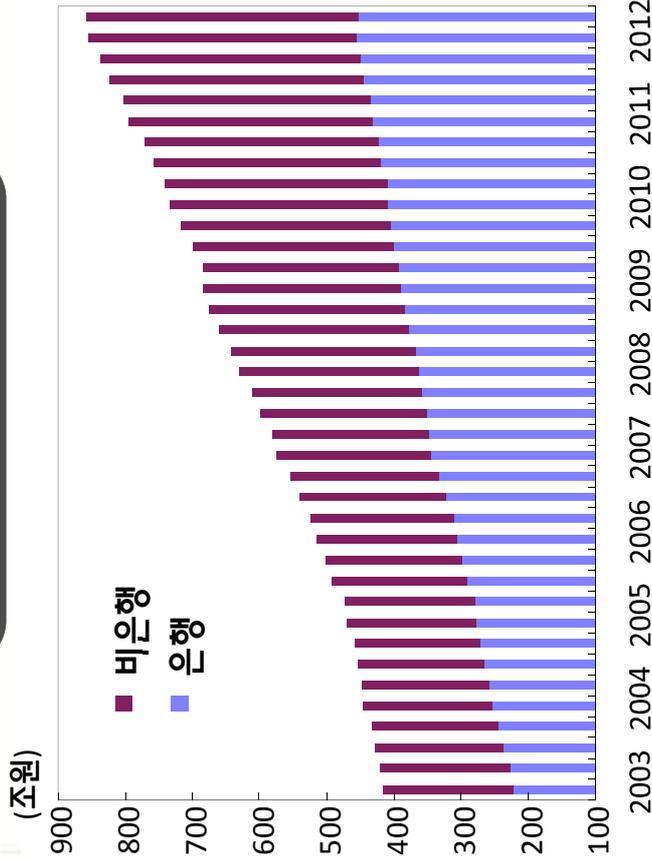
#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지속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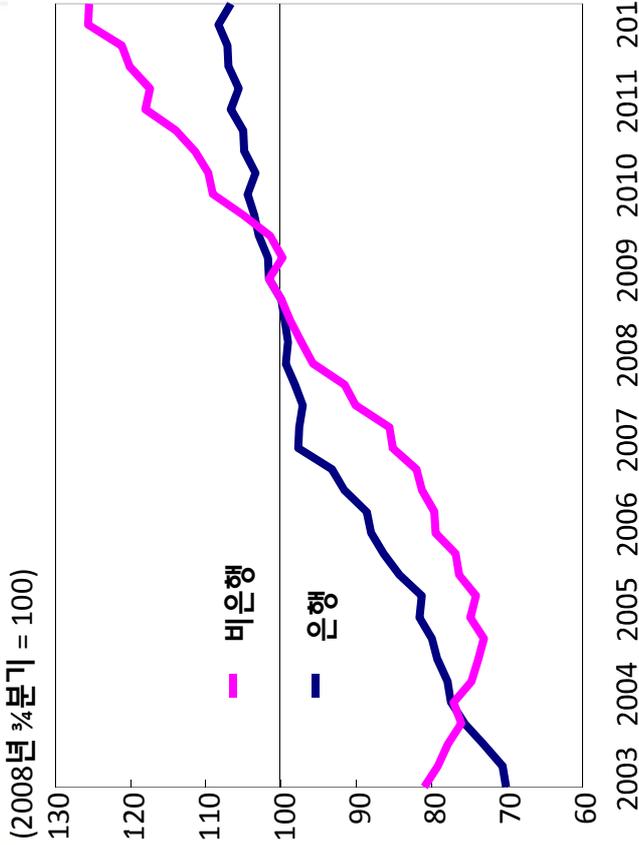
■ **지난 1/4분기 말 가계신용은 은행 453조원, 비은행 405조원 등 총 858조원**

● **2008년 3/4분기 이후 은행 가계신용은 7% 증가한 데 반해 비은행은 26% 증가**

가계대출(명목)



가계대출(실질)



주: 1) 은행 = 예금은행, 비은행 = 비은행 예금취급기관+기타금융기관.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우체국  
 기타금융기관 = 보험기관, 연금기관, 여신전문기관, 공적금융기관, 기타금융증개회사, 기타.  
 2) 가계대출(실질)은 CPI로 실질가치화.

#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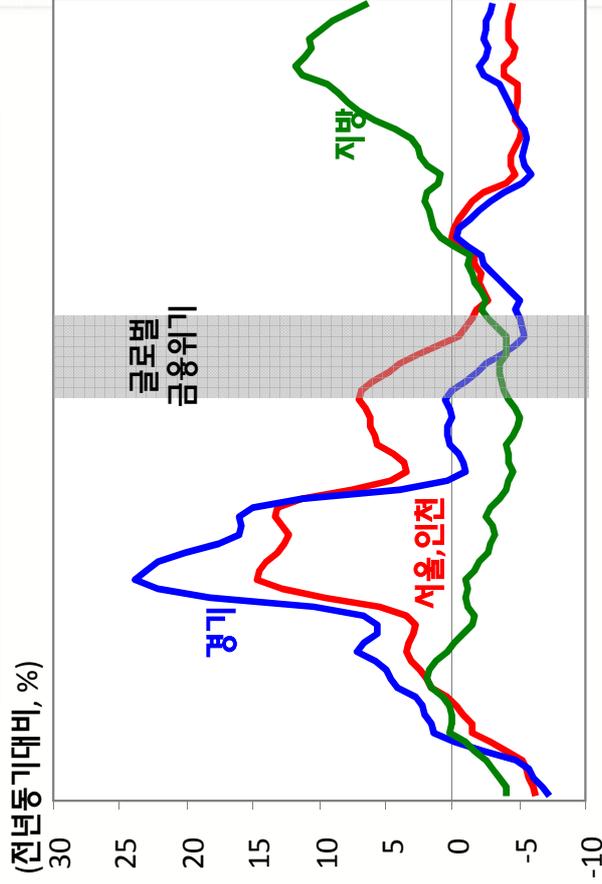


주택시장은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수도권과 지방 간의 차별화된 시장동향 지속

- 지방 광역시 매매가격은 지난 2년간의 가파른 상승세 이후 작년 하반기부터 성장률 둔화
- 서울·인천·경기도의 매매가격은 2010년 이후 음(-)의 성장률 지속
- 전세가격도 작년 하반기 이후 성장세 둔화

아파트 거래량 및 입주물량은 2011년 하반기 이후 큰 폭의 감소세 지속

지역별 실질 주택매매가격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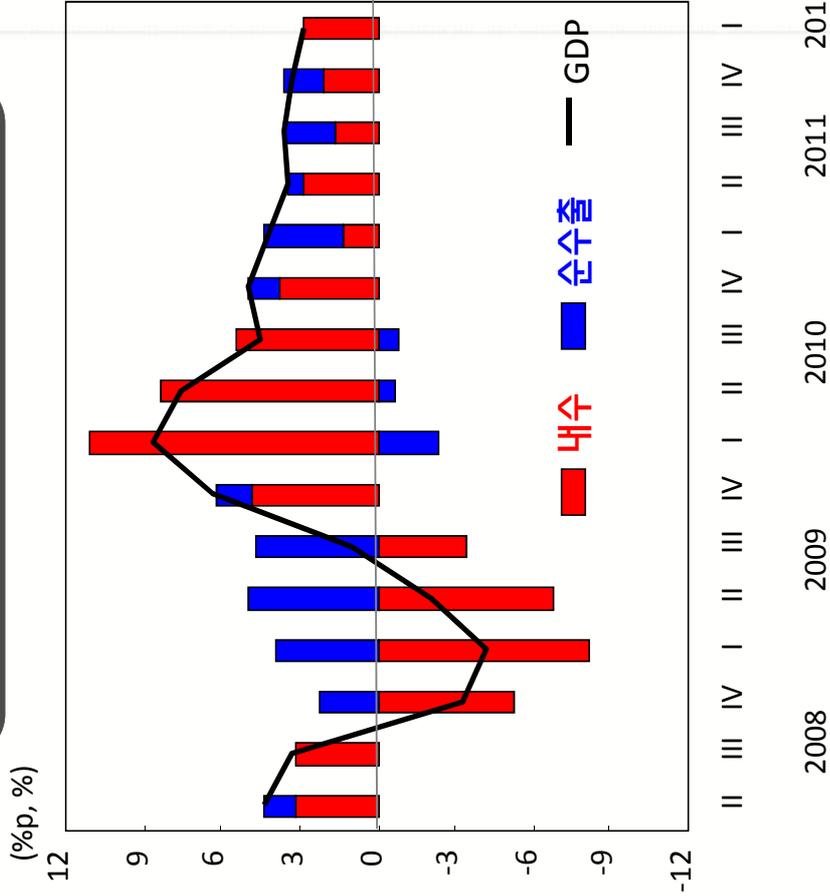
2005.1 2006.1 2007.1 2008.1 2009.1 2010.1 2011.1 2012.1

주: 서울, 인천은 두 지역의 주택매매가격을 단순평균한 값이며, 지방은 부산, 대구, 광주, 대전광역시의 주택매매가격을 단순평균한 값임.  
 자료: KB 국민은행, 한국은행.

유럽위기와 대외수요 약화로 수출둔화가 예상되나, 대내여건의 개선에 힘입어 내수부문을 중심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판단

- 수출 증가세가 유럽지역을 중심으로 둔화되면서 순수출의 성장기여도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
- 반면, 원자재 가격 안정, 물가안정 및 임금상승 등 가격변수가 우호적으로 작용하면서 내수부문의 증가세는 전년에 비해 소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

내수와 순수출의 성장기여도



## 경제전망

(전년동기 대비, %, 억달러)

	2011				2012				2013	
	연간 <sup>(1)</sup>	1/4 <sup>(2)</sup>	2/4	3/4	4/4	연간	연간	연간	연간	
국내총생산 (계절조정 전기대비)	3.6	2.8 (0.9)	3.3 (1.0)	3.5 (1.2)	4.5 (1.3)	3.6	3.6	4.1	4.1	
민간소비	2.3	1.6	1.8	2.8	4.6	2.7	2.7	4.0	4.0	
설비투자	3.7	9.1	4.4	7.2	12.1	8.1	8.1	6.2	6.2	
건설투자	-5.0	2.1	2.4	2.3	5.2	3.1	3.1	4.4	4.4	
상품수출(물량)	10.5	4.5	5.2	6.0	12.2	7.1	7.1	10.7	10.7	
상품수입(물량)	8.7	4.6	2.4	4.6	10.3	5.5	5.5	10.2	10.2	
경상수지	265	26	51	44	62	183	183	122	122	
상품수지	310	27	81	70	92	269	269	242	242	
(수출증가율)	(19.7)	(5.5)	(4.9)	(5.7)	(11.9)	(7.0)	(7.0)	(7.2)	(7.2)	
(수입증가율)	(23.8)	(8.3)	(4.9)	(6.2)	(13.6)	(8.2)	(8.2)	(8.1)	(8.1)	
서비스	-44	-1	-29	-26	-30	-86	-86	-120	-120	
본원·이전소득수지	4.0	3.0	2.5	2.4	2.6	2.6	2.6	2.8	2.8	
소비자물가 (근원물가)	(3.1)	(2.5)	(1.8)	(1.8)	(2.1)	(2.0)	(2.0)	(2.5)	(2.5)	
실업률 (계절조정)	3.4	3.8 (3.5)	3.4 (3.4)	3.2 (3.3)	3.1 (3.3)	3.4	3.4	3.3	3.3	

- 유럽재정위기의 지속 및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유가 상승 가능성 등의 불안요인은 우리경제의 하방위험으로 작용할 가능성
  - 유럽재정위기의 해결방안 도출에 실패할 경우, 유럽지역의 경기침체가 심화되어 세계경제 성장세가 크게 위축될 가능성
    - IMF에 따르면 유럽재정위기로 인한 하방위험이 실현되는 경우 세계경제 성장률이 1%p 내외 하락할 가능성이 존재
  - 한편 유럽재정위기가 유동성 공급 등의 조치로 완화되고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미국경제의 개선주세가 현실해지는 경우, 세계경제의 회복세는 예상보다 가속화될 가능성
  -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원유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유가 및 원자재 가격이 크게 상승하여 세계경제 회복을 지연시킬 가능성
  - 최근의 부실 저축은행 문제로 인한 금융불안이 지속되면서 신용공급이 위축될 경우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가 내수를 제약할 가능성

■ 향후 세계경제 성장세 약화에 따른 둔화요인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나, 거시경제정책의 기조를 전환할 필요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

- 작년 하반기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완만한 둔화되고 있으나, 금년 하반기부터는 견실한 회복세가 예상
- 금년 유럽재정위기로부터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이 재부각되었다는 점에서 중장기 재정건전성에 우선순위를 두는 현재의 재정정책 기본방향은 바람직
  - 유럽재정위기를 중심으로 대외여건이 급속히 악화되는 경우, 정책여력이 상대적으로 큰 재정정책을 중심으로 경기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
- 최근 부실 저축은행 문제가 금융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금융안전망을 점검하는 한편, 저축은행 부문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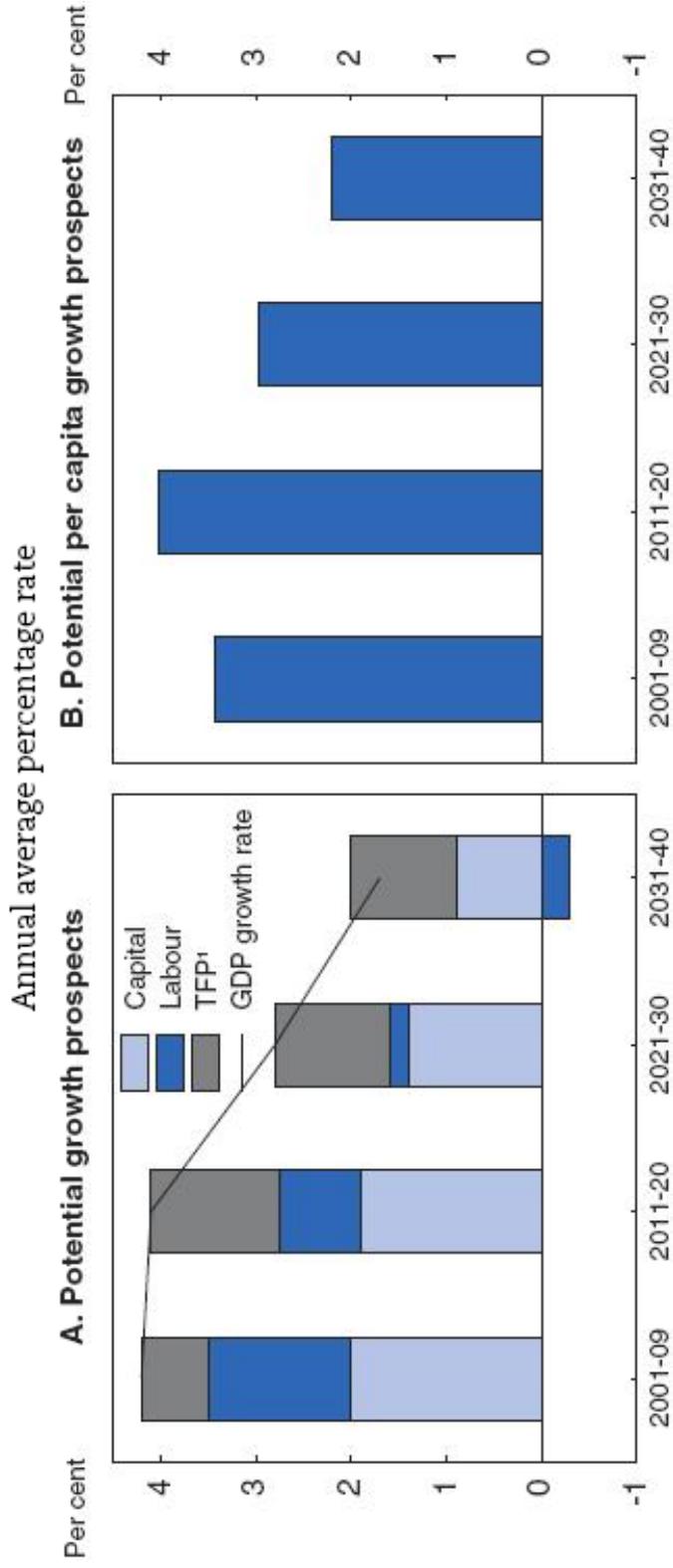


#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점

인구증가율 하락, 저축률 하락, 추격형(“catch-up”) 경제성장 단계의 종료 등으로 인해 잠재성장률은 점차 하락

- 2001-09년 4.2%, 2011-20년 4.1%, 2021-30년 2.8%, 2031-40년 1.7%

Figure 1.3. Korea's potential growth prospects



1. Total factor productivity.

Source: Korea Development Institu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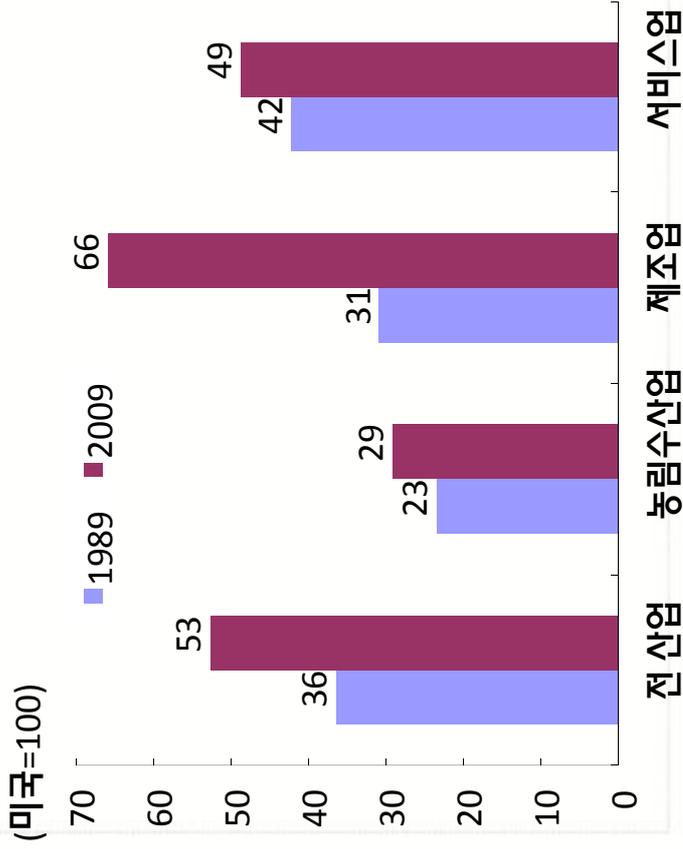
#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의 격차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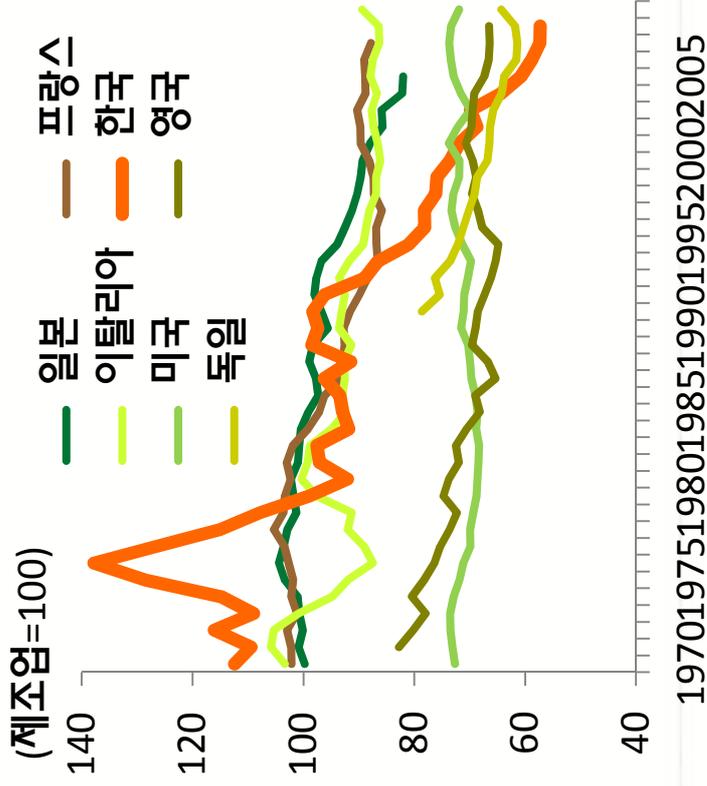
1989-2009년간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은 미국(100) 대비 큰 폭(31→66) 증가

- 반면 서비스업(42→49)의 노동생산성 증가는 미진
- 1990년대 초부터 서비스업과 제조업 간 임금격차 확대

1인당 부가가치(PPP 기준)



서비스업의 이용자 보수



자료: OECD STAN Database.

# 서비스업 가운데 低부가가치 부문이 과대



■ 도소매·음식·숙박, 기타 지역·사회·개인서비스 등 저부가가치 업종이 전체 서비스업 고용의 50%를 차지

부가가치	세부업종	1인당 부가가치 (백만원)	고용비중(%)	
			한국(A)	미국(B) A-B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융·보험·부동산·사업서비스</li> </ul>	67(100)	19	22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운수·보관·통신</li> <li>공행정·국방</li> <li>보건·사회사업</li> <li>교육</li> </ul>	45 (68)	32	42
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소매·음식·숙박</li> <li>기타 지역·사회·개인서비스</li> </ul>	18 (27)	50	36
서비스업 전체		36 (54)	1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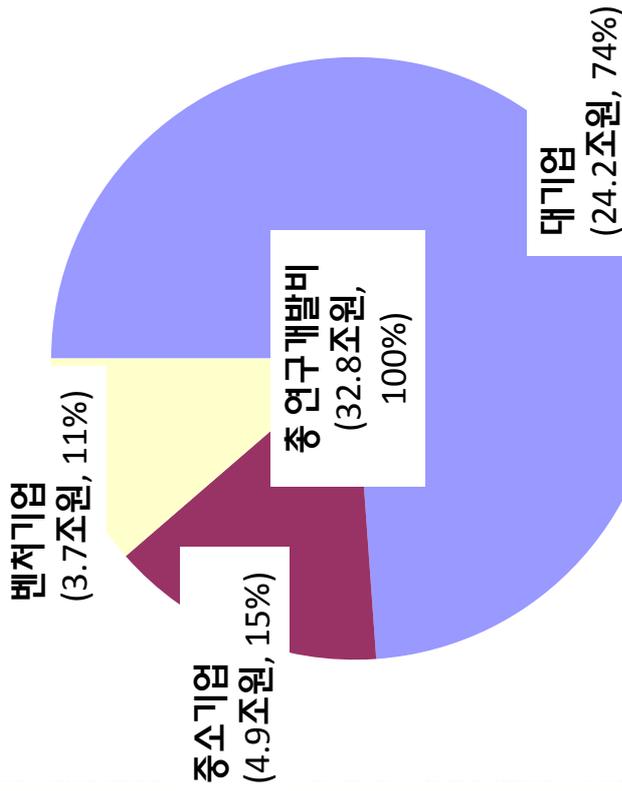
주: 2009년.  
자료: OECD STAN Database.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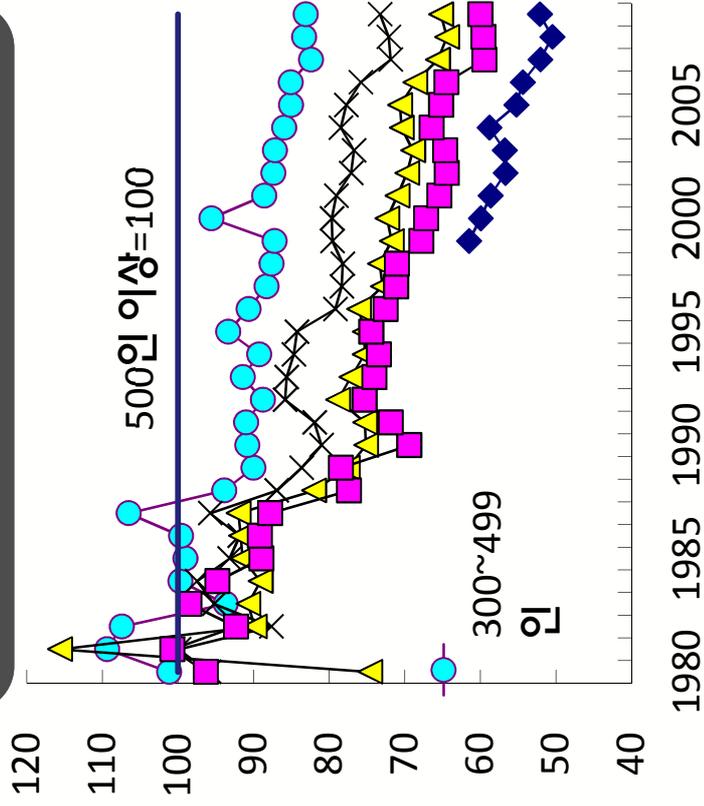
- 중소기업은 R&D 지출 등 모든 측면에서 대기업과 큰 차이
- 중소기업의 임금은 1990년대 초부터 대기업 대비 계속 하락

기업유형별 연구개발비(2010)



자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임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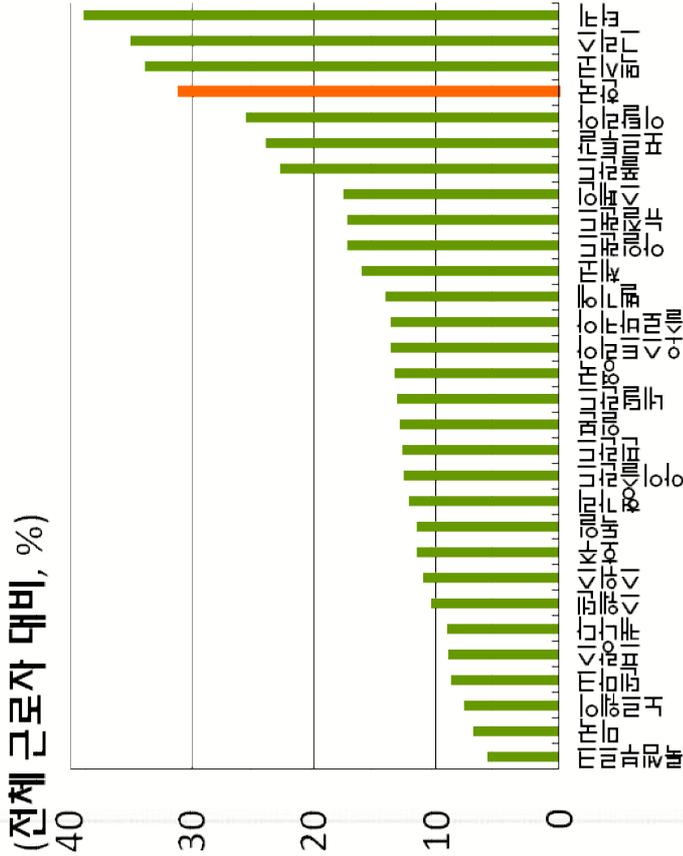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 영세기업의 비중 과다



- 전체 근로자 중 자영업자의 비중(약 30%)은 OECD 국가 중 최상위

자영업자 비중(2008)



자료: OECD.

- 전체 근로자 2천4백만명 중 1-4인 기업 40%, 5-299인 52%, 300인 이상 8% (2010, 통계청)

- 제조업에 국한할 때에도 영세기업의 고용비중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

기업규모별 고용비중 (제조업, 2002)

기업규모	한국	영국	독일	일본	프랑스
1~9인	43	10	7	11	12
10~249인	44	45	38	58	41
250인 이상	13	45	55	31	47

자료: OECD, SME and Entrepreneurship Outlook, 2005.

# 부문 간 격차 확대는 저임금 국가의 부상과 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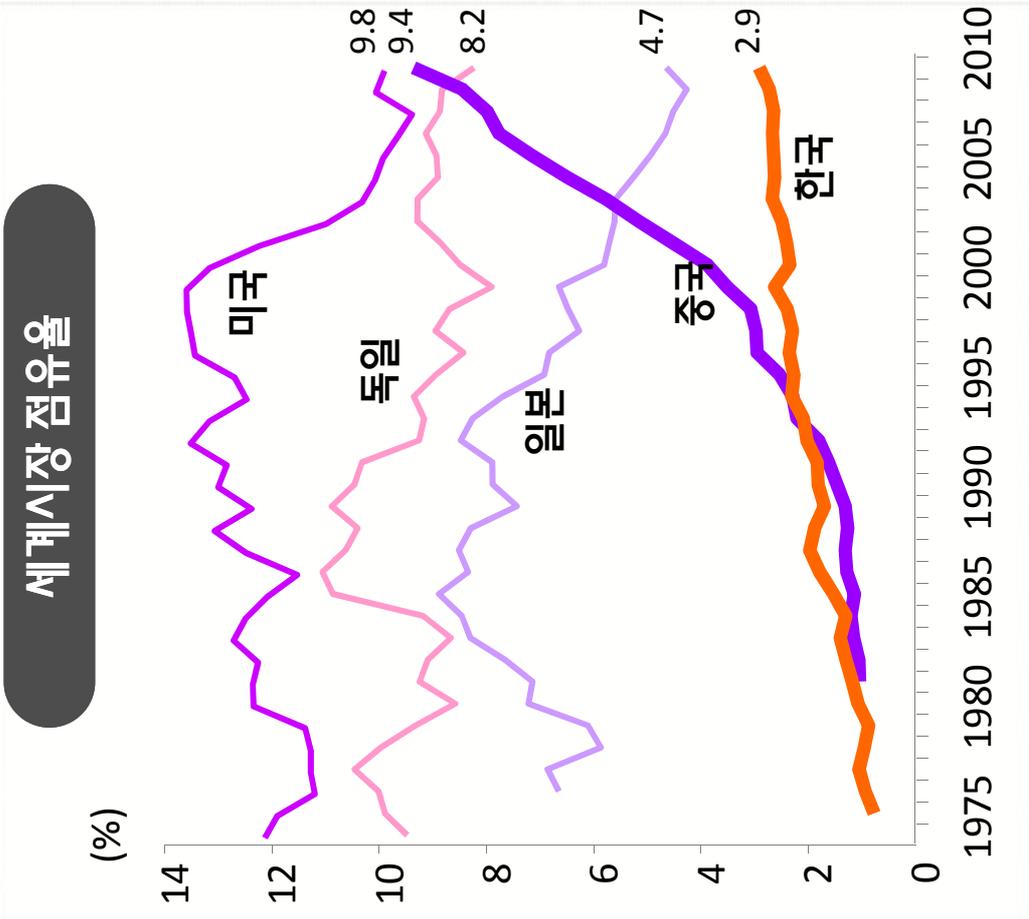


■ 1990년대 이후 중국은 세계 제1위의 수출대국으로 부상

- 한국은 高부가가치 산업으로 계속 옮겨갈 수밖에 없는 상황 (Gill and Kharas, 2006)

■ 대기업 및 제조업은 세계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변신에 성공

- 반면 국내시장에 머물러온 중소기업 및 서비스업은 지속적으로 생산성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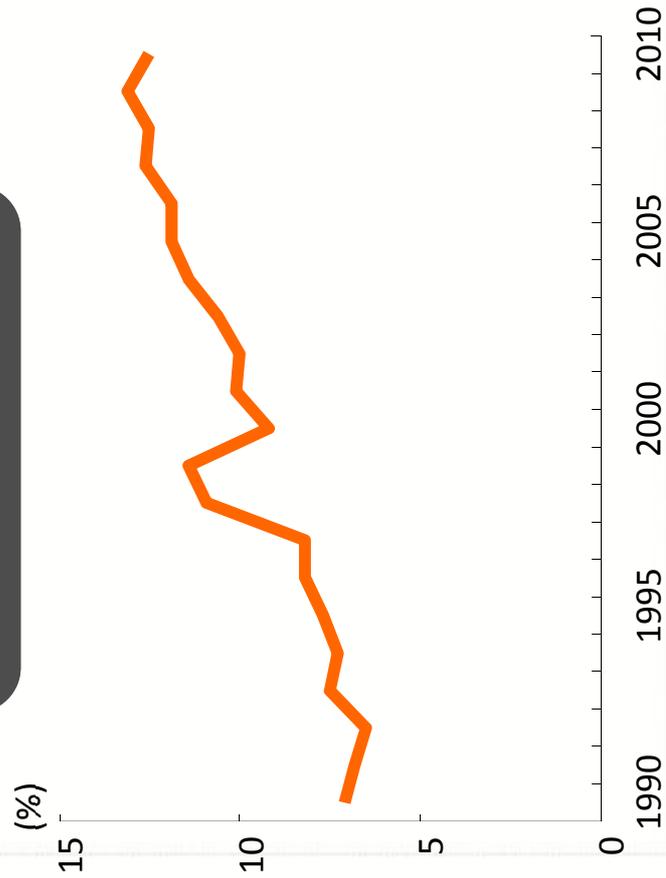
# 경제구조 변화와 함께 소득분배 약화



## 1990년대 초부터 소득분배 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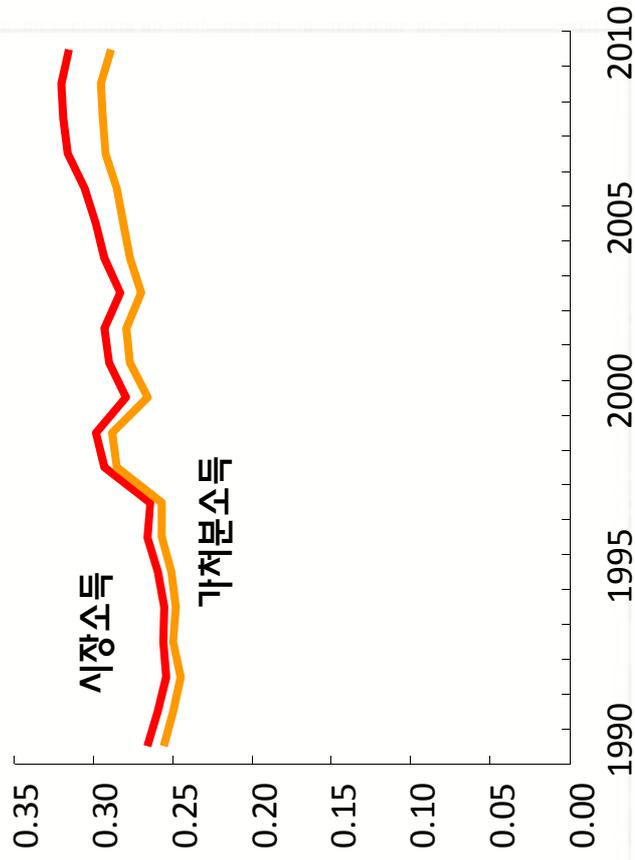
- 상대빈곤율: 1992년 6.5% → 2009년 13.1% (+6.6%p)
-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 1992년 0.245 → 2009년 0.295 (+0.05p)

### 상대빈곤율



자료: 통계청.

### 지니계수



자료: 통계청.

# 공교육의 취업지원 기능 미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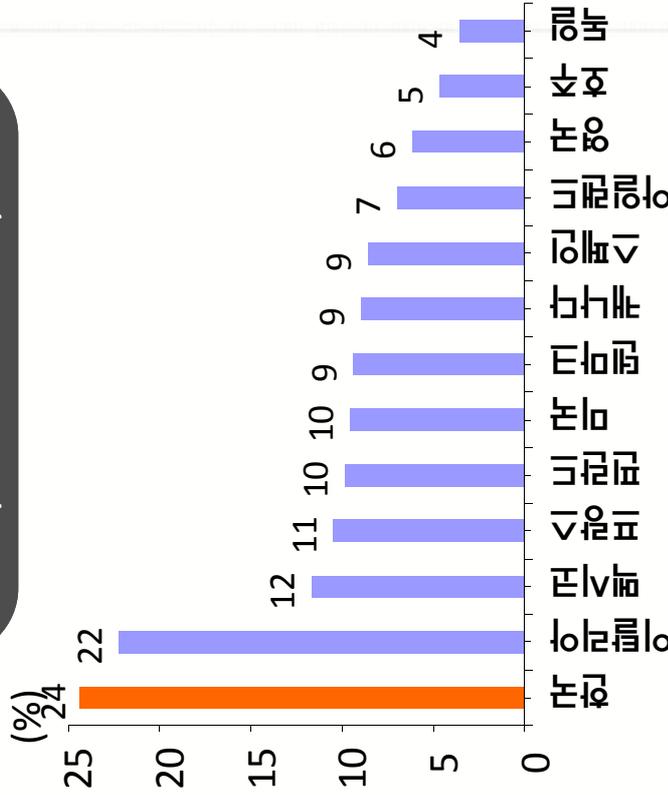
## ■ 대학교육과 산업현장 간의 미스매치 증대

- 청년실업 증가(2010년 34만명, 8.0%)
- 대졸자 중 NEET의 비중은 OECD 국가 중 최상위
- 기업들은 대졸사원의 재교육에 막대한 비용 지출

## ■ 1990년대 이후 대학교육이 일반대학 위주로 확장

- 입학생 수(1999 → 2010년)
  - 일반대학: 31.9 → 35.9만명
  - 전문대학: 30.7 → 24.9만명
  - 산업대학: 3.1 → 1.8만명

대학졸업자 중 NEET의 비중  
(15~29세, 2004)



주: NEET는 근로, 교육, 훈련에 참가하지 않는 인구(neither in employment nor in education or training). 한국 및 뉴질랜드 2005년, 영국 2003년.  
자료: 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08.



중장기 경영 · 사회정책의 핵심과제

- **안심할 수 있는 정부부채의 수준에 대해 다양한 의견 존재**
  - Reinhart and Rogoff(2010): 90%
  - Cecchetti et al.(2011): 85%
- **그러나 최근 남유럽 재정위기에서 보듯이 매우 낮은 수준의 부채에서도 재정위기가 발생할 수 있음.**
  - GIIPS 국가 중 아일랜드와 스페인은 재정이 건전하였으나 위기에 봉착
  - 특히 국제금융시장의 외곽(periphery)에 위치한 국가들은 투자심리가 위축될 때 가장 큰 타격
- **GIIPS 국가들과 같이 국제금융시장의 외곽에 위치한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재정건전화 노력 필요**
  - 비과세 감면 축소를 통한 세원 확보
  - 경제사업 R&D 등 지출구조조정 추진

	정부부채/GDP (%)		1인당 GDP (USD, PPP)	인구 (천명)
	2007	2013		
아일랜드	25	118	40,458	4,471
스페인	36	84	31,888	46,073
한 국	31	31	29,101	50,516

주: 1인당 GDP와 인구는 2010년 기준.  
 자료: IMF, OECD.

## 이런 글로벌 금융위기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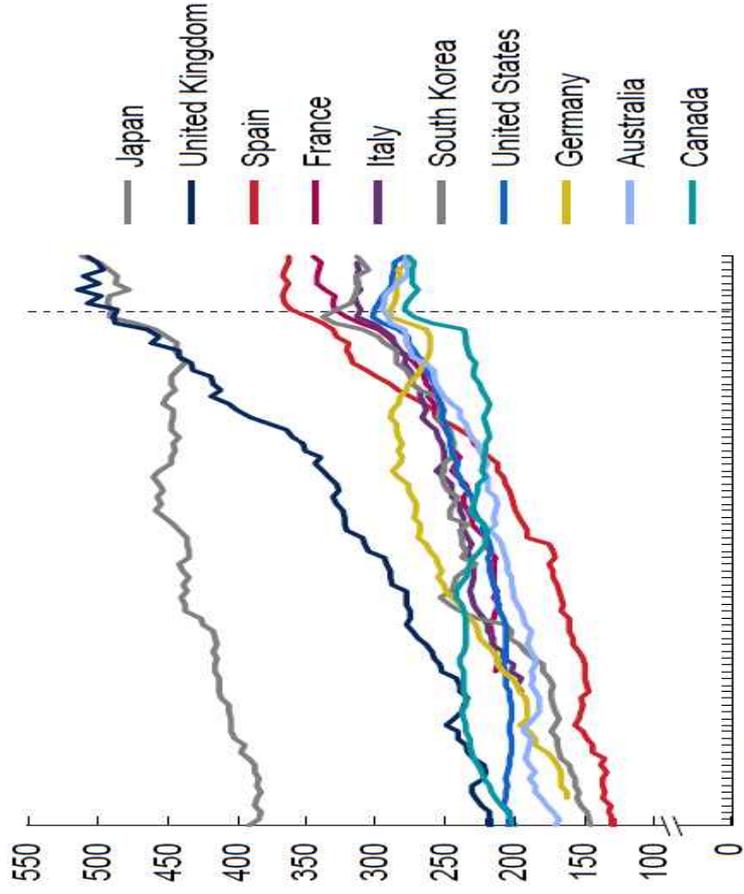
- 총수요의 과도한 팽창이
- 자산가치의 거품과 지속 불가능한 채무증가를 초래하여
- 결국 파국을 초래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

## 경기과열을 예방하는 선제적

### 거시경제운용 필요

- 통화정책: 성장보다 물가에 초점
- 재정정책: 위기 시 외에는 경기부양 자체, 재정건전성 유지에 초점
- 금융시장정책: 거시건전성 감독 강화, 부실 누적 예방

총부채(1990-2011.1/4)



주: 총부채는 가계, 기업, 금융기관, 정부의 부채 합계.  
 자료: McKinsey Global Institute, *Debt and Deleveraging: Uneven Progress on the Path to Growth*, 2012. 1.

# 경제의 미시적 유연성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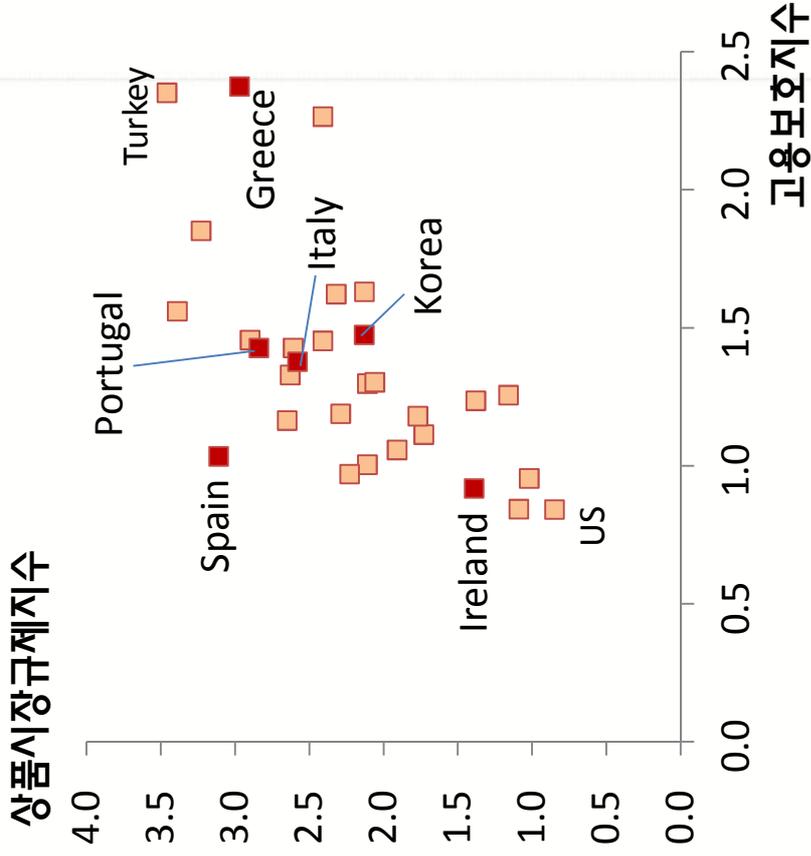
## ■ 경제가 유연할수록 빠른 회복 가능

- 경쟁적 상품시장: 독과점 근절, 기업의 진입과 퇴출이 용이
- 유연한 노동시장: 신축적 임금조정, 기업 간/산업 간/지역 간 신축적 노동력 이동

## ■ 종합적 유연성 제고노력 필요

- 담합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규제개혁
- 보호 위주의 기업/산업정책 폐기, 한계기업 퇴출 및 M&A 원활화
- 민간 임대주택시장 활성화
- 임금체계 개편(연공급 → 성과급), 정규직 고용보호 축소

OECD 상품시장규제지수 및 고용보호지수(2008)



주: 상품시장규제지수(Product Market Regulation)와 고용보호지수(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는 규제가 가장 적을 때 0, 가장 많을 때 6의 값을 가짐.  
자료: OECD.

## ■ 학과 통제함

- 취업률이 낮은 학과의 정원 축소, 높은 학과 확대
- 각 대학의 교과과정 개편위원회에 교육소비자 및 산업계 인사 포함

## ■ 산학협력 교육과정 확대

-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확산: 교과과정에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는 대신 기업이 졸업생의 고용을 보장
- 현장실습 과정의 학점 인정 폭을 대폭 확대

## ■ 대학 유형의 다양화

- 패션, 요리, 미용, 엔터테인먼트, 디자인, 유통, 건강관리, 관광 등 신흥 산업군의 수요에 적극 대응
- 유인체계 마련
  - 대학 재정지원 산정공식 (formula)에 대학의 특성화 및 학과별 졸업생 취업성과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
  - 시범사업 단계에 있는 ‘대학 취업지원역량 인증제’를 안정적으로 정착

## ■ 우리나라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매우 취약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관련 지출(2007, GDP 대비): 한국 0.13%, OECD 0.50%
- 개별 실업자 및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공공고용서비스 기반이 극히 취약
- 빠른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서비스 대폭 강화
  - 고용센터의 인력과 예산 확충: 맞춤형 상담, 훈련, 직업알선 제공
  - 사업 통합: 자활근로, 취업성공패키지, 정부지원 일자리 등
  - 기초보장제도 개편: 근로 무능력자 중심의 제도로 전환
  - 근로장려세제: 지원금액 증대 및 지원대상 확대
  - 육아 및 보육정책: 저소득층 취업모 지원에 초점



Korea's Leading Think Tank



# 감사합니다.



# “한국경제 긴급진단과 향후 정책과제”

## 지정토론 I. 경제운용 부문



신제윤 (기획재정부 제1차관)

### [ 학 력 ]

1993.06                    美 코넬대학원 석사  
1981.02                    서울대 경제학과

### [ 경 력 ]

2011.09 – 현    재    기획재정부 제1차관  
2011.03 – 2011.09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2008.03 – 2011.03    기획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  
2007.11 – 2008.03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국장  
2007.05 – 2007.11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  
2005.05 – 2007.05    국제금융국 국제금융심의관  
2002.01 – 2005.04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과장, 금융정책과장, 전경련 파견)  
1998.02 – 2001.07    재정경제부 (국제금융센터, 대통령비서실 파견)  
1994.12 – 1996.11    재정경제원 (금융협력담당관실, 금융정책과, 美 보험감독청)  
1993.07 – 1994.02    재무부 (특수보험과, 국제금융과)  
1991.07                해외유학 (美 코넬대학원)  
1982.04 – 1991.05    재무부 (행정관리담당관실, 투자진흥과, 금융정책과, 은행과, 국고과)  
1981.04                총무처 행정사무관



# “한국경제 긴급진단과 향후 정책과제”

## 지정토론 1. 경제운용 부문

신제윤 (기획재정부 제1차관)

※ 토론문 현장 배포 예정



# “한국경제 긴급진단과 향후 정책과제”

## 지정토론 II. 통화·거시 부문



김준일 (한국은행 부총재보)

### [ 학 력 ]

1984.09 – 1988.05    美 Brown University 경제학 박사  
1982.09 – 1984.05    美 Brown University 경제학 석사  
1975.03 – 1979.02    서울대 경제학 학사

### [ 경 력 ]

2012.04 – 현    재    한국은행 부총재보  
2011.03 – 2012.04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장  
2002.01 – 2011.02    IMF Deputy Division Chief, Research Department  
1997.03 – 1999.06    재정경제부 장관자문관  
1996.01 – 1996.05    Stanford University Visiting Scholar  
1992.09 – 2001.12    한국개발연구원 거시경제팀장  
1991.08 – 1992.08    국민경제제도연구원 연구위원  
1988.09 – 1992.08    UC Santa Cruz 경제학과 조교수



# “한국경제 긴급진단과 향후 정책과제”

## 지정토론 II. 통화·거시 부문

김준일 (한국은행 부총재보)

### I 현 경제상황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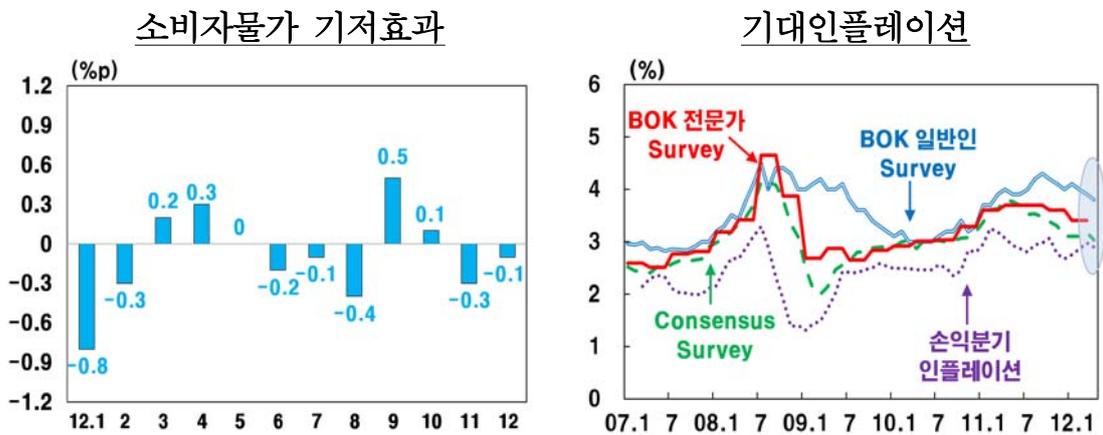
- ① (성 장) 국내 경기는 1/4분기 이후의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실물지표가 월별로 등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1~4월중으로는 수출 모멘텀이 이어지는 가운데 건설을 제외한 내수부문의 개선 흐름이 유지
  - 향후 **성장경로**에 있어서는 국제유가 하락이 상방리스크로 작용하겠으나 유로지역 재정위기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인해 **하방리스크가 증대**
  - (소비·설비투자) 소득 증가, 비IT 업종의 투자 호조 등에도 불구하고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개선추세가 제약될 가능성
  - (건설투자) 건물건설을 중심으로 점차 부진에서 벗어나겠지만 회복 속도는 매우 완만할 것으로 예상
  - (수출)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으나 대외 불확실성 확대시 활력이 약화될 소지

#### 향후 경제성장의 위험요인

<상방리스크>	<하방리스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미국 경기회복세 진전</li><li>▪ 원/달러 환율 변동성 축소</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스페인 등을 중심으로 유럽 재정 위기 악화</li><li>▪ 중국 등 신흥국의 경기 둔화</li><li>▪ 이란사태 악화 등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li></ul>

- ② (물 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표상으로는 2%대 중반을 유지하고 있으나 **기조적 물가상승 압력**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무상급식 등 특이요인을 제거한 조정평균, 평균백분위 인플레이션 등 보조지표는 5월중 전월에 이어 3~4% 수준의 상승세를 지속

- 보육비 및 급식비가 예년 수준으로 올랐다고 전제하면 5월중 소비자 물가는 3.2% 상승하였을 것으로 추정
- 기저효과 등을 감안할 때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당분간 3%를 밑돌 것으로 예상되어 **금년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월 전망(3.2%)보다 낮아질 가능성**
- 향후 **물가경로**에 있어서는 국제원자재가격 하락 등 **하방리스크 요인**과 높은 기대인플레이션, 공공요금 인상폭 확대 등 **상방리스크 요인**이 대체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판단



③ **(경상수지)** 흑자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4월 전망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상품수지 흑자가 지속되고 서비스수지도 개선\*되면서 당초 전망보다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확대**될 가능성

\* 중국 노동절(4.29~5.1) 및 일본 골든위크(4.28~5.6) 연휴, 여수엑스포 등에 힘입어 4~5월중 여행수입이 크게 증가한 반면 여행지급은 원화약세 등으로 감소 예상

- 다만 향후 수출규모는 글로벌 경기회복 지연,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당초 전망보다 줄어들** 소지

▪ 국제유가 하락은 주력 수출상품인 석유제품 및 화공품의 단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

\* 2006~11년중 Dubai유가와 석유제품 및 화공품 수출단가간 상관계수는 각각 0.99, 0.89

## II

## 통화정책 운용방향

① **(기준금리 및 총액한도대출금리)** 국내외 실물경제, 금융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연 3.25%로 유지하고 총액한도 대출금리도 연 1.50%에서 동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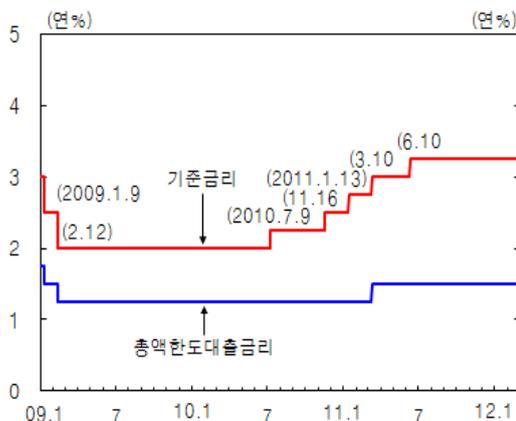
- 기준금리는 2011.6월, 총액한도대출금리는 2011.3월 이래 동일 수준을 유지

② **(유동성 조절)** 콜금리를 기준금리 수준으로 유도하기 위해 환매조건부증권(RP) 매매, 통화안정증권 발행, 금리경쟁 입찰방식 통화안정계정 운용 등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시중 유동성을 조절

- 기초적 유동성 조절수단인 통화안정증권 발행잔액은 2012.5월말 167.0조원 (전년말 대비 +2.2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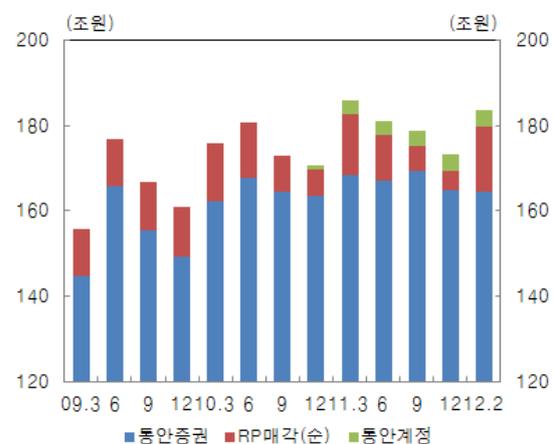
③ **(향후 운용방향)** 해외 위험요인 및 이에 따른 국내 금융·경제상황 변화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낮추도록 노력** 하면서, 견실한 경제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기적 시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의 중심선에서 안정되도록 통화정책을 운용

기준금리 및 총액한도대출금리



자료: 한국은행

공개시장조작 수단별 유동성 조절 규모



자료: 한국은행

### Ⅲ

##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 ① 단기적으로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매우 큰 만큼 우선 유로지역 재정위기의 진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비상대응계획 (Contingency Plan)**을 점검하는 한편 **대외 충격에 대비하여 거시·미시정책을 운용**할 필요
- **(재정정책)** 재정건전화 노력은 지속하되 실물경제 위축 등 여건 악화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확대
    - 재정집행의 우선순위\*, 사용방식 등을 사전 점검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
      - \* 정책의 실행시차(implementation lag)가 짧거나, 재정승수(fiscal multiplier)가 큰 순으로 순위를 배정함과 동시에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도 노력
    - 리먼사태 직후와 같이 경기가 급속히 위축될 우려가 있는 경우 추가 경정예산 편성도 고려
  - **(통화정책)**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실물경제 움직임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용
  - **(환율정책)**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되 쏠림현상 발생시 이를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
- ② 위기상황에 대비한 정책과 함께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할 수 있는 중·장기적 정책과제에 대해서도 노력을 지속
- **(성장·소득간 선순환관계 유도)** 수출중심의 성장에서 벗어나 내수의 성장 기여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거시정책을 운용하는 한편 고용의 질적 개선에도 노력
  - **(취업애로계층에 대한 고용안전망 확충)** 취업애로계층의 특성(연령별, 성별, 학력별, 종사상 지위별)을 고려한 고용안정 대책을 적극 추진

- **(물가안정 노력 지속)** 그간 인상이 억제됐던 공공요금 및 가공식품의 가격인상 요구가 높아지고 석유류, 농산물의 가격변동성도 커질 수 있으므로 물가불안심리가 확산되지 않도록 유의
  - **(중견기업의 적극적 육성)** 중견기업 지원관련 법규 마련, 중소기업 지원제도 개선 및 중견기업의 금융애로 해소 등을 통해 중견기업을 적극 육성
  - **(수출모멘텀 유지 강화)** 대외여건 악화 가능성 및 교역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을 통해 현재의 수출모멘텀을 유지·강화
    - 중남미, 중동 등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기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자원수출국에 대한 교역환경 개선 등을 통해 수출 상대국 및 패턴을 다양화
    - 각종 통상 분쟁 및 교역관련 규제 변화에 수출이 제약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
- ③ 한편,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국내 경기 회복세가 당분간 완만한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금년 하반기부터 견실한 회복세가 진행될 것으로 보는 **KDI 예측은 다소 낙관적인** 것으로 평가



# “한국경제 긴급진단과 향후 정책과제”

## 지정토론 III. 금융안정 부문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 [ 학 력 ]

1993년 8월	미국 시카고대학교 경제학 박사
1986년 2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1984년 2월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졸업
1979년 2월	대전고등학교 졸업

### [ 경 력 ]

2012.03 - 현	재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2005.08 - 현	재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1995.03 - 2005.07		명지대학교 경영무역학부 교수
1993.09 - 1994.10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현) 금융산업발전심의회 글로벌 금융분과위원장

(현)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

(현) 동반성장위원회 위원

(전)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위원

(전) 예보위원회 위원



# “한국경제 긴급진단과 향후 정책과제”

## 지정토론 III. 금융안정 부문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 1. 한국경제 대내외 위험요인

#### 가. 대외적 위험요인

##### (유럽 재정위기)

- 스페인은 지난 6월 9일 자국 은행부문에 대한 구제금융을 공식 요청
  - EFSF와 ESM이 개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1,000억유로의 자금 지원을 할 전망이며, 긴축의무가 없고 그리스 총선 전 방화벽이 설정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
  - 그러나 스페인 정부부채 급증, 재정수지 악화 가능성 등은 부정적 요인으로 지적
- 단기적으로 유럽 재정위기는 그리스 총선 이후의 상황 전개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전망
  - 그리스 총선 이후 예상되는 시나리오
    - <시나리오 1> 긴축안 준수 및 유로존 존속
    - <시나리오 2> 긴축안 재협상 및 유로존 존속
    - <시나리오 3> 긴축안 거부 및 유로존 존속
    - <시나리오 4> 긴축안 거부 및 유로존 탈퇴
- 시나리오별 경제성장률을 보면, 그리스 및 유럽의 경우는 성장정책이 결합된 <시나리오 2>의 경우가 가장 높을 전망

- 세계경제 및 국내경제의 경우는 <시나리오 1> 및 <시나리오 2>의 성장률이 서로 유사할 것으로 예상
  - \* <시나리오 1>은 기존합의 준수로 불확실성이 보다 일찍 해소되는 반면 <시나리오 2>는 그리스 및 유로존의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면서 세계 및 국내 경제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두 경우 모두 유사할 전망
- <시나리오 3>의 경우 세계경제 및 국내경제 성장률 모두 2%대 중반으로 하락

**<표 2> 시나리오별 2012년 예상 경제성장률**

정당	그리스	유로존	세계경제	국내경제
시나리오 1	Δ5.0%	Δ0.5%	3.5%	3.4%
시나리오 2	Δ3.0~Δ4.0%	Δ0.3%	3.5%	3.4%
시나리오 3	Δ7.0~Δ10.0%	Δ1.5%	2.5%	2.4%
시나리오 4	Δ20.0~Δ30.0%	Δ2.0% 미만	2.0% 미만	2.0% 미만

**(중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

- 최근 유럽 위기 등으로 경제지표가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금년 중 중국 경기의 둔화 정도가 예상보다 클 수 있다는 우려가 확대
- 2012년 1분기 GDP 성장률이 시장의 예상치에 못 미치는 8.1%를 기록하였고 2분기에는 8%를 하회할 가능성이 있음.
  - \* 2011년 분기별 성장률: 1Q 9.7%, 2Q 9.5%, 3Q 9.1%, 4Q 8.9%
- 1~4월 중 중국의 수출은 전년동기비 6.8% 증가에 그쳤으며 특히 약 20%를 차지하는 유럽으로의 수출은 감소세(Δ0.8%)를 보임.
- 하지만 최근 중국 정부가 경기부양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하고 있어서 하반기에는 부양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며 전년(9.2%)에는 못 미치지만 8% 가량 성장하는 연착륙의 가능성이 큼.
- 중국의 물가가 4월 중 전년동기비 3.4%로 목표수준인 4% 아래로 떨어지며 부양정책을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확대

- 앞으로 기준률과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가 이루어질 전망
  - \* 21.5%였던 은행의 기준률을 작년 11월, 올해 2월 및 5월 각각 0.5%p씩 인하하였고, 기준금리인 1년만기 예금 및 대출금리를 6월 초 25bp 인하
  - \* 과거 기준률 및 기준금리 조정경로를 보면 한번 정책방향이 전환된 이후 수차례에 걸쳐 추가조정이 이루어졌음.
  - \* 특히 과거에도 기준률 조정에 이어 기준금리 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6월 기준금리 인상은 정책방향이 부양중심으로 전환된 것으로 해석 가능
  
- 중국 정부의 재정여력이 큰 가운데, 절전형 가전제품 소비촉진책 도입, 정부주도의 사회간접자본 투자 확대 등 부양책이 실시됨에 따라 하반기에는 내수의 성장세가 빨라질 전망
  
- 위안화도 그간의 절상기조에서 전환되어 5월 중 1% 가량 절하된 것도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수출에 도움이 될 전망
  
- 다만, 중국 정부가 조기에 금리인하를 단행함으로써 5월 경제지표가 더욱 악화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으며 다음 점에서 중국 정부의 부양책의 효과가 리먼사태 직후보다 떨어질 수 있음.
  -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관련 투자가 과거에 비해 조심스러울 수 있음.
  - 지난 부양책의 결과로 지방정부의 부채가 상당히 늘어나 지방정부의 재원 조달이 제약을 받을 가능성
  
- 최근의 중국 경기부진을 반영하여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도 2012.1/4분기 중 전년동기비 0.7% 증가에 그치는 등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특히 중국의 경기회복은 수출보다는 내수, 투자보다는 소비의 비중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전개될 전망인데,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은 가공무역 위주로 되어있어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음.

- \* 2011년 중 대중국 수출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4.2% 차지
- \* 2011년 중 대중국 가공무역 비중은 우리나라가 48.9%로 일본 (33.4%), 미국 (17.9%) 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임.

□ 또한 향후 중국 경착륙 우려가 국제금융시장에서 이슈가 될 때마다 중국과의 밀접한 연관성 때문에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동반하여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는 중국과 밀접한 경제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중국에 비해 금융시장의 유동성이 높고 외국인 자금의 유출입이 자유로워 중국 경제의 향방에 대한 betting을 할 수 있는 대체(proxy) 시장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임.

## 나. 대내적 위험요인

### (가계부채)

□ 대내외 경기둔화 및 금융불안 지속, 정책당국의 리스크관리 강화 등의 영향으로 상환능력이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가계부채 증가율이 둔화됨에 따라 금융비용이 부담이 계속해서 증가

- 정상차주의 평균 부채상환비율이 수년째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위기 직후인 2009년 1/4분기 이후 처음으로 2012년 1/4분기말 가계신용 규모(911.4조원)가 전기대비 감소
- 정상차주의 부채상환비율(DTI)을 보면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고소득층의 경우에도 금융비용부담은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며, 자산대비 부채비율도 전 소득층에서 확대되고 있는 추세
  - \* 특히 고소득층의 경우에도 은퇴준비가 미처 되지 않은 하우스푸어 베이비부머들이 은퇴와 함께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 부동산경기가 더욱 크게 급락하며 부실이 증가할 가능성

<표 3> 소득분위별 부채상환비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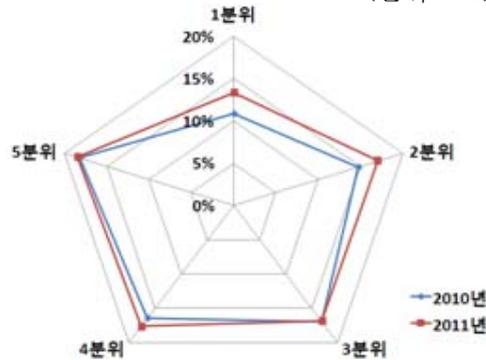
	2009.3	2010.3	2011.3	2012.3
1분위	18.12	18.67	21.45	23.34
2분위	16.19	15.74	16.99	18.79
3분위	17.35	17.21	18.38	19.92
4분위	19.77	20.42	21.11	22.77
5분위	26.26	26.47	27.12	28.82
평균	19.54	19.70	21.01	22.73

주 : 평균 DTI는 연체차주를 제외한 정상차주만을 대상으로 산출

자료 : KCB

<그림 1> 소득분위별 자산대비부채비율

(단위 : %)



자료: 가계금융조사(통계청, 금감원, 한은)

(성장과실의 편중과 고용구조의 취약성)

□ 가계-기업, 수출-내수, 대기업-중소기업 등 부문간 불균형이 확대되고 고용의 안정성 및 임금수준이 낮은 부문을 중심으로 취업자수가 증가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출대기업이 경기회복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기업 및 수출 부문의 성장세가 각각 가계 및 내수 부문을 크게 상회하는 가운데 대기업의 경영성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개선

\* 2011년중 수출의 성장기여도는 5.0%p로 전년(7.3%p)에 비해 대체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내수의 기여도는 전년의 7.1%p에서 2.0%p로 큰 폭 하락

○ 대외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여 기업들이 주당 36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 경기변동에 따른 고용조정이 용이한 채용형태를 선호

○ 베이비붐 세대를 중심으로 한 고령층이 퇴직후 사업지원, 운수, 건설 등 임금수준이 낮은 부문에 재취업하거나 소규모 자본으로 자영업에 진출하는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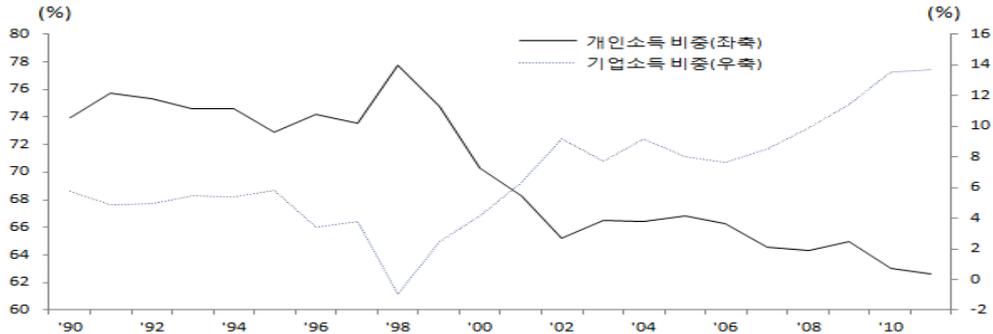
<표 4> 수출 및 내수의 성장기여도

(%p)

	'05	'06	'07	'08	'09	'10	'11
내수	3.7	4.7	4.6	1.3	-3.3	7.1	2.0
수출	3.2	4.5	5.0	2.8	-0.6	7.3	5.0

자료 : 한국은행

<그림 2> 가계 및 기업의 국민처분가능소득 대비 비중



자료 : 한국은행

(민간소비 부진)

□ 대외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있는 가운데 소득부진, 부채누중에 따른 상환부담, 유동성 제약 등으로 민간소비 신장세가 둔화될 가능성

\* 주택 소유자는 ‘하우스 푸어’, 젊은 층은 결혼비용 부담에 따른 ‘허니문 푸어’, 중년 층은 자녀 교육비 부담으로 인한 ‘에듀 푸어’, 노년층은 ‘실버 푸어’라는 조어가 나올 정도로 가계의 소비심리가 전반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상태

○ 임금수준이 낮은 부문을 중심으로 취업자수가 증가하면서 가계부문으로의 소득흐름이 제한

\* 최근 취업자수가 큰 폭으로 늘어난 서비스업 임금수준은 전산업 평균임금대비 97%, 중소기업 임금수준은 88%, 60세 이상 연령층 임금수준은 77%에 불과

○ 또한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 및 한계차입자 확대가 소비부진 → 경기둔화 → 고용부진, 소득감소 → 부채상환 능력 악화 → 한계차입자 확대의 악순환 고리를 형성할 가능성

- \* 특히 가계의 소득 및 부채 증가세가 제한적인 가운데 높은 금융비용부담이 계속되면 소비가 크게 위축되는 한편 한계차입자의 확대는 사회문제로도 확대될 여지가 있음.

**<표 5> 부문별 임금수준 및 취업자수 증감**

(전산업 임금 =100, 원계열, 전년동기대비, 만명)

		(임금수준)	'08	'09	'10	'11	'12.1~4월
산업별	건설업	( 78)	-3.7	-9.1	3.3	-0.2	7.5
	제조업	(107)	-5.2	-12.6	19.1	6.3	-9.6
	서비스업	( 97)	25.9	18.1	20.0	38.3	54.2
사업체 규모별	중소규모 사업체	( 88)	11.7	-18.9	35.4	37.8	46.2
	대규모 사업체	(147)	2.8	11.7	-3.1	3.8	0.2
연령별	청년층(15~29세)	( 73)	-11.9	-12.7	-4.3	-3.5	0.7
	30대	(108)	-2.6	-17.3	-0.4	-4.7	-6.8
	40대	(115)	6.4	-2.4	2.9	5.7	2.1
	50대	(107)	20.7	19.8	29.4	29.1	30.7
	60대 이상	( 77)	1.8	5.4	4.7	14.9	19.6

자료 : 통계청

## 2. 향후 중점 추진과제

### (거시정책 방향)

-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당분간 현 수준을 유지하다가 향후 글로벌 여건 및 경기상황 등을 감안하여 정책금리 변경을 검토
  - 유럽 재정위기 심화, 하반기 재정정책 여력 소진 등에 대비하여 선제적 금리인하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기 보다는 가계부채 문제 등 거시건전성에 보다 유의하여 안정적으로 통화정책을 운용
    - \* 가계부채 부실화, 부동산시장 경착륙 가능성 우리 경제의 내부요인으로 급작스런 자본유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하여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
  - 재정정책 측면에서도 경기부양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건전화에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

- 유럽 재정위기 악화, 중국경제의 침체 가속화가 현실화되는 경우에는 금융시장 불안과 경기급락을 억제하기 위해 최소 두 차례 이상에 걸쳐 50b이상 금리 인하를 시행
  - 재정정책도 재정건전화 보다는 실물경제 급락 저지에 초점을 맞추어 추경 편성 등을 통해 우리 경제가 급속히 추락하는 것을 억제할 필요

**(급격한 자본유출입에 대응)**

- 단기적으로는 자본유출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고 컨틴전시플랜을 정비하는 등 극단적인 상황악화에 대비
  - 외환전산망 자료 등을 이용하여 외국인투자자의 투자주체별, 지역별로 자본유출입을 분석하여 주된 변동요인별로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
  - 국내은행의 중장기차입의 만기가 특정시기에 집중되었는지 점검하여 차환 리스크를 관리하고 잔존만기를 감안한 유동외채비중을 관리
  - 급격한 자본유출 우려시 외환건전성부담금, 선물환포지선한도 등 최근 도입한 정책의 규제수준을 완화하는 방안 검토
  - 환율급등 및 외화자금시장 경색 등 극단적인 상황에서 우리나라 은행들의 외화자금사정변화, BIS비율 변화, 외화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의 부실가능성 등에 대처
- 유럽 문제가 단시일내에 해결되지 않고 지지부진할 경우에 대비하여 국제공조를 통해 정책 수단을 정비하고 추가적인 외화유동성 확보 방안을 강구
  - 유럽문제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고조된 가운데 저금리로 수익률 압박을 받는 외국인투자자들이 단기투자에 치우칠 가능성이 있어, 개방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자본유출입 및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 가능성

-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국경간 자금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온 유럽계 은행의 디레버리징으로 글로벌 자금증개기능이 위축될 가능성
  - \* 유럽계은행은 자본확충 필요성에 따른 디레버리징으로 신용규모를 축소하고 있으며, 신용등급하락으로 조달비용도 상승
  - \* 최근 발표된 BIS 은행통계에 따르면 주요선진국 은행의 자금회수로 국경간거래 규모가 축소되고 있음.
- OECD 혹은 G20을 통해 급격한 자본유출입을 제어하는 자본이동관리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필요
- 지난 5월 합의된 CMIM 강화 내용이 실무적으로 실행되도록 구체안을 마련하여 이번 위기 극복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

## (가계부채 안정화)

- 대출서비스의 접근성 제고보다는 부채상환이나 저축 증대를 제고하는 등 부채관리 위주의 정책을 지속하되 단기간의 성과보다는 일관된 정책이 장기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
  - 이와 함께 서민금융이나 일자리창출을 통한 소득개선 등과 연계를 통하여 한계차입가계들의 환경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진행시킴으로 충격을 최소화
  - 자영업자의 경우 구조조정시 현재 상환능력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사업성에 대한 검토를 동반하여 미래의 더 큰 부실을 미연에 방지하고 조기에 신사업이나 임금고용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
  - 한편 부실가능성이 높은 다중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체계를 구축하고 감독당국이 주기적으로 다중채무자의 여신실태를 파악하는 등 다중채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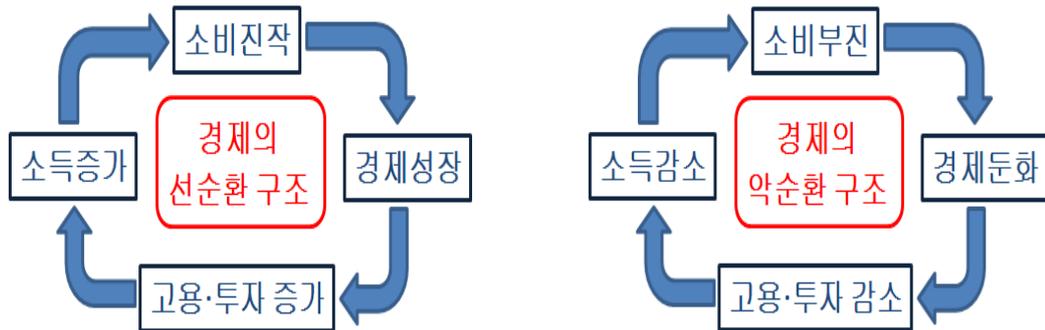
의 여신상황에 대한 관리 강화

- \* 특히 주담대 다중채무자의 경우에는 “개인별 주거은행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주거은행이 전체 대출규모를 감안해 상환여력을 평가하고 원리금 상환 촉진을 유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토록 하는 방안 검토

### (내수의 성장기여도 제고)

- 내수의 성장 기여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반 경제정책을 운용함으로써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할 필요
  - 우리나라와 같은 자원부족국의 경우 수출 중심의 성장이 어느 정도 불가피하겠으나 내수기반이 위축될 경우 고용개선이 제약되고 대외충격에 대한 내성이 약화될 우려
  - 다만 단기적인 내수 부양은 경상수지 악화, 저축률 하락, 가계부채 증가 등 부작용이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내수의 성장기여도 제고는 장기적으로 내수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공급 부문의 개선에 초점을 둘 필요
    - \* 이를 위해 서비스업의 인적·제도적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내수성장 기반 구축하고 국내투자의 발목을 잡고 있는 구조적 문제들을 해소하여 투자를 활성화하고 이로부터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
  - 이와 같은 내수의 성장기여도 제고를 통해 소비진작 → 경제성장 → 고용 및 투자 증가 → 소득증가의 선순환 구조가 다시 나타날 수 있도록 유도

<그림 3> 경제의 순환구조



(중소기업의 부실 확대 대응 및 고용취약계층 보호)

- 향후 경기회복이 상당기간 지연될 경우 내수부진 등으로 중소기업 부실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청년층, 50세 이상 중고령층, 저직능 근로자 등 고용취약계층의 고용여건이 급속히 악화\*될 상황에 대한 대비가 필요

\* 2011년중 고용탄력성(경제성장률 1%p 변동에 따른 취업자수 증감폭)을 감안할 경우 예를 들어 금년 경제성장률이 3.4%에서 2.9%로 0.5%p 하락한다면 취업자수 증가폭은 35만명에서 29만명으로 6만명 축소될 전망

- 중소기업대출 부실 확대에 대비하여 우량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과 정책 금융의 역할을 견조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회사도 내부유보를 확대하는 등 재무건전성 유지에 중점을 둘 필요
- 이와 함께 최근 고용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저임금 일자리에 대해서는 채용·해고절차 및 임금·복지조건 명시화, 근로감독 강화 등에 주력하는 것이 중요



# “한국경제 긴급진단과 향후 정책과제”

## 지정토론 IV. 국제금융 부문



**박원암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 [ 학 력 ]

1985年 MIT 경제학과 졸업 (경제학 박사)  
1976年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졸업

### [ 경 력 ]

1994 - 현 재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1985 - 1994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1976 - 1980 한국은행 조사부

한국국제경제학회 차기 회장 (2013)  
기획재정부 재정정책자문회의의 위원 (현재)  
한국금융학회 회장 (2008 - 2009)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위원 (2009)  
한국계량경제학회 회장 (2004)  
국제금융센터 운영위원 (1999 - 2000)  
재경부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1998 - 1999)



# “한국경제 긴급진단과 향후 정책과제”

## 지정토론 IV. 국제금융 부문

박원암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KDI는 올해 1/4분기 중 경제성장률이 3%를 밑돌고 있으나 하반기 이후 성장률이 높아지면서 내년에는 4%대의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전망은 IMF의 세계경제 전망과 비슷한 것으로서 IMF는 내년 세계경제성장률이 올해 3.5%에서 내년에는 4.1%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관심지역인 유럽의 성장률도 올해 마이너스 0.3%에서 내년에는 플러스 0.9%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전망에는 전제가 있다. 우선 KDI는 유럽재정위기의 지속 및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유가상승의 위험이 경제회복을 방해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며, IMF도 중장기적으로 건전한 성장을 위한 경제구조의 개선 없이는 경제회복이 힘들다고 보고 있다. IMF는 유럽 위기가 심화되어 세계경제와 유로존의 GDP가 2년 동안에 각각 2% 및 3.5% 낮아질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중동지역의 불안으로 유가가 50% 상승할 경우 세계경제 GDP가 1.3% 낮아질 수 있다고 전망한다. 이와 같이 우리 경제 회복의 복병은 여전히 유럽의 위기와 유가상승의 위험이라고 하겠다.

최근 그리스 총선에서 신민당이 승리함으로써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할 가능성은 낮아졌으나 그렇다고 유럽의 위기가 진정된 것은 아니다. 스페인과 이태리를 포함한 소위 PIIGS 국가의 위험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독일, 프랑스를 비롯한 북유럽 국가들은 지금까지 써온 ‘당근과 채찍’ 정책을 계속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그들이 지금까지의 정책을 바꾸지 않는 한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급기야 마이너스로 전환한 유럽의 성장추세가 단기간에 바뀔 것으로 전망되지는 않는다.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이 성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독일과 다른 북유럽 국가들이 어느 정도나 협력할 수 있을 것인지는 아직도 불확실하다.

유럽의 위기는 G20의 정책 공조도 약화시켰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국제통화제도의 개혁 문제는 주로 G20를 통하여 논의되어 왔는데, 유럽 위기가 발생하면서 국제통화제도의 개혁보다는 유럽 위기의 타개에 더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다. 그러나 유럽의 문제는 넓게 보면 국제통화제도의 문제이다. 유로를 공통통화로 사용하는 지역 내에서의 불균형 완화 문제는 美 달러화에 페그된 아시아 및 신흥경제국의 불균형 완화 문제와 동일하다. 지금 유럽은 스페인에 구제 금융을 제공하면서 유럽 내 은

행에 적절한 규제를 하는 은행동맹(Banking Union)을 강조하고 있으나, G20 내에서도 Basel III를 중심으로 이 문제를 논의하여 왔다. 마지막으로 유럽 위기를 진정시키기 위한 긴급유동성 공급 문제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신흥경제국을 중심으로 이미 제기된 바 있다. 유럽은 아직도 ECB를 통한 긴급 유동성 공급에 미온적이며, 신 ECB는 유통시장에서 회원국 국채를 매입하며, 장기저리자금을 공급하고 있다.

신흥경제국은 위기발생 시 어김없이 해외자본이 유출되면서 자국 통화가 급락하는 유동성 위기를 겪는다. 따라서 신흥경제국들은 G20를 통해서, 혹은 주요국과의 통화스왑을 통해서, 혹은 지역 내 협력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여 왔으며,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IMF는 Flexible Credit Line을 마련하고, Precautionary and Liquidity Line 도 마련하였다. 또한 중국은 IMF의 특별인출권(SDR)을 국제통화로 사용하자고 제안하였으며,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은 CMIM(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을 통한 통화협력을 강화하였다.

하지만 실제로 위기가 발생했을 때 해외로부터 긴급 유동성이 얼마나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을 것인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위기가 심화될수록 긴급 유동성을 조건 없이 제공하려 하지 않는다. IMF의 자금지원뿐만 아니라 통화스왑과 역내 협력을 통한 유동성 지원에도 조건을 붙이려 하면서 자금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다못해 자국의 외환보유액도 원활하게 사용하지 못한다. 위기가 심화될수록 외환보유액을 사용하는 대신 방어벽으로 삼고자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발생할 수도 있는 대형 유로존 위기에 대응하려면 위기 이전부터 다각도로 방어책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위기대응 능력은 크게 강화되었다. 외환보유액이 현재 3,000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으며, 2008년 문제시 되었던 단기외채 비율도 크게 낮아졌다. 금융기관들의 건전성도 개선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외국인투자비율은 여전히 높은 편이다. 올해 3월 말 우리나라의 대외채권에서 대외채무를 차감한 순대외채권은 995억 달러이나 직접투자, 주식 등에 대한 투자를 고려한 국제투자를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1,268달러의 순외국인투자를 보이고 있으며, 외국인 증권투자가 무려 5,368억 달러에 달한다. 이는 우리나라가 여전히 위기에 따른 해외자본 유출에 취약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정부는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선물환 포지션 한도 규제, 외환건전성 부담금, 채권투자 과세 등 3중 세트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외환건전성 부담금은 자본유출입에 대한 과세가 아니다. 또한 이러한 규제가 과연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재점검하여 필요하다면 새로운 규제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 “한국경제 긴급진단과 향후 정책과제”

## 지정토론 V. 민생안정 부문



김종수 (중앙일보 논설위원)

### [ 학 력 ]

1985年 서울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1979年 대전고등학교 졸업

### [ 경 력 ]

2004.11 - 현 재 중앙일보 논설위원  
2003.07 - 2004.10 중앙일보 경제부 부장  
2002.03 - 2003.06 중앙일보 경제부 차장  
1999.01 - 2002.02 중앙일보 워싱턴총국 특파원  
1988.07 - 1998.12 중앙일보 경제부, 국제경제부, 기획취재부 기자  
1986.08 - 1988.07 한국개발연구원 (KDI) 연구원  
1985.02 - 1986.08 한미은행 근무

재경부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1998 - 1999)



# “한국경제 긴급진단과 향후 정책과제”

## 지정토론 V. 민생안정 부문

김종수 (중앙일보 논설위원)

민생은 일반 국민의 생활 및 생계를 말한다. 그렇다면 거의 모든 경제 정책이 다 민생과 관련된다. 물가 안정도 민생이고, 생필품의 수급 문제도 민생이며, 소득 양극화도 민생이다. 이런 식이라면 오늘 거론된 모든 경제 현안들이 모두 민생 문제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민생이라고 할 때 그 대상은 일반 국민이 아니라 주로 서민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생각된다. 서민은 일반적으로 저소득 계층을 지칭하지만 중하위소득 계층을 포괄적으로 가리키기도 하고, 넓게는 경제, 사회적 취약계층을 통칭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민생 문제는 복지정책의 대상으로 귀결된다. 마침 오늘 토론 주제에 복지정책이 따로 없으므로 민생안정 분야는 복지정책을 중심으로 논의해 보겠다.

서민생활의 안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일자리와 소득이다. 일자리가 있어야 소득이 있고, 소득이 늘어나야 생활이 안정된다. 일자리를 잃고 소득이 없어진 다음에 복지정책으로 구제하기 보다는 스스로 일해서 돈을 벌어서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복지정책인 것이다.

일자리는 근본적으로 경제가 성장해야 생긴다. 그러나 최근 우리 경제의 성장속도는 둔화됐고, 그나마 더딘 성장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 능력은 더욱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 아시다시피 수출, 대기업, 제조업의 고용유발효과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이들 분야가 주도하는 경제성장 방식으로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없다. 결국 일자리 창출의 해법은 내수, 서비스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것이 그렇게 간단치 않다는데 있다.

KDI도 지적했듯이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생산성은 제조업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 서비스업 종사자의 대부분이 도소매, 음식, 숙박, 사회, 개인 서비스업 등 부가가치가 낮은 영세업종에 몰려 있다. 특히 최근 고용 통계에서도 드러나듯이 은퇴시기를 맞은 50대 베이비부머들이 노후 생계대책으로 이들 영세 자영업에 대거 뛰어들면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한정된 업종에서 출혈경쟁을 벌이는 바람에 수익성이 악화되는 것은 물론 한계에 몰린 자영업자들이 퇴출되면서 그나마 남은 노후자금마저 날리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는 잠재적인 복지수요의 증가를 유발시킨다. 은퇴자들의 과도한 영세

자영업 진입을 줄이고, 한계 자영업자들의 퇴출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퇴직자들이 전문성과 경험을 살려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 한계 자영업자들의 전직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들이 자영업 대신 고정급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야 한다.

그러자면 서비스업의 구성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 앞서 언급한 저부가가치형 영세자영업의 비중을 줄이고, 교육·의료·관광·법률·서비스업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을 획기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이들 서비스업의 시장을 더욱 개방하고 영리법인 허용 등을 통해 시장규모를 늘려나가야 한다. 그동안 해당 이익집단의 반발 때문에 미뤄졌던 서비스업의 개방과 규제 철폐를 이제는 국가적 과제로 삼아 단행할 때가 됐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이 제시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복지정책의 근간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연령대별로 그 시기에 꼭 필요한 복지혜택을 정부가 제공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그런 복지를 제공하는 데에도 일정한 원칙이 필요하다.

첫째는 부담능력을 감안한 복지여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복지는 공짜가 아니라 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 재원은 누군가가 대야한다. 정부재정을 재원으로 삼는 복지를 늘리려면 방법은 두 가지 뿐이다. 정부가 빚을 내든지, 세금을 더 걷든지 해야 한다. 빚내서 늘리는 복지는 후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고, 세금을 통한 복지 확대는 당대에 누군가의 부담을 늘리는 것이다. 그런데 부자들에게 더 뜯어내서 복지를 늘리자는 약탈적 발상은 경제의 건전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 흔히 스웨덴식 고복지 시스템을 예로 드는데 스웨덴은 엄청난 고부담 국가다. 부자들에게서만 세금을 왕창 뜯어서는 고복지 시스템을 유지할 수 없다. 스웨덴은 일반 국민들이 소득의 40% 이상을 세금으로 낸다. 자기가 낸 세금으로 높은 복지혜택을 누리는 것이다. 남이 낸 세금으로 높은 복지혜택을 누리겠다는 발상은 사회의 건강한 근로의욕을 해치고 궁극적으로 나라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린다. 정치권은 포퓰리즘에 휘둘러 그런 기대를 국민에게 심어줘서는 안된다.

둘째는 시장원리를 훼손하지 않는 복지다. 최근 신자유주의의 부작용을 말하면서 시장만능에 대한 불신이 큰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부작용이 있다는 것과 시장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것과는 다른 얘기다. 한국경제와 나아가 세계경제를 움직이는 기본 원리는 여전히 시장경제다.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시장이 더 잘할 수 있는 분야에까지 정부가 끼어들면 곤란하다. 복지도 마찬가지다. 예컨대 저소득층을 지원한다며 기름값이나 전기료, 통신비 등을 깎아주자는 주장이 많이 제기되고 일부는 정책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가격의 결정과정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시장의 정

상적인 작동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과도한 행정비용과 자원배분의 왜곡을 낳는다. 누구에게 얼마를 깎아줄지를 공무원이 일일이 정해서 감독하기도 어려울뿐더러 각종 부정과 비리가 생길 우려도 크다. 또 특정 재화의 값을 깎아줄 경우 해당 재화의 수요를 과도하게 늘려 자원배분의 왜곡을 부른다. 똑같은 돈을 어디에 쓰는 것이 가장 효과적 일지는 쓰는 사람이 제일 잘 안다. 복지지원을 받는 저소득층 입장에선 전기나 통신보다 식료품이 더 절실할 수 있다.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지원은 개별품목의 가격할인보다 차라리 포괄적인 생계비 지원을 늘리는 쪽이 효과적이다. 이는 대학생에 대한 반값 등록금이나 반값 아파트 등도 마찬가지다.

또 재래시장과 골목 상권을 지킨다며 대형수퍼마켓의 영업을 규제하는 것도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의 몰락에 대형수퍼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수 있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이 경쟁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최근 대형수퍼에 대한 영업규제로 또 다른 서민인 수퍼 종업원들의 일자리가 날아가고, 소비자들의 불편만 늘렸다는 사실은 반시장적인 정부 개입과 규제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하는 대목이다.

셋째는 자활을 돕는 복지여야 한다는 점이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최선의 복지는 일자리를 주는 것이다. 일할 능력 자체를 상실한 사람들에 대한 기초생활 보장과 공공부조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확실적인 생계비 보조보다는 일할 동기와 기회를 늘려주는 다양한 지원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KDI가 제시한 근로 무능력자 중심의 기초보장제도 전환, 고용센터 확충 및 근로장려세제 확대, 육아 및 보육지원 확대 등은 매우 바람직한 정책처방이라고 생각된다.

당면한 민생 현안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 중의 하나는 하우스푸어(House Poor) 문제다. 주택시장의 장기침체와 함께 주택거래가 거의 끊기면서 달랑 집 한 채만을 가진 은퇴자와 은퇴예정자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이는 가계부채 문제와 맞물리면서 자칫하면 금융위기로 번질 위험마저 안고 있다. 또한 이들이 안정적인 수입원이 없는 상태에서 노후를 맞을 경우 엄청난 복지수요의 증가를 부를 수 있다. 하우스푸어 계층이 부동산 자산을 점진적으로 현금화할 수 있도록 금융정책과 부동산정책의 세심한 조율이 필요하다.



# “한국경제 긴급진단과 향후 정책과제”

## 지정토론 VI. 부동산/가계부채 부문



김광수 (김광수경제연구소 소장)

### [ 학 력 ]

- 1987.04 – 1993.08 일본 동경대 경제학부 박사과정 수료, 가격이론 전공  
1983.03 – 1985.02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국제재무론 전공)  
1979.03 – 1983.02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 경 력 ]

- 2000.05 – 현 재 金光洙經濟研究所 소장 겸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 대표  
1999.12 – 2000.04 노무라 종합연구소 서울지점 연구총괄부장  
1995.07 – 1999.12 노무라 종합연구소 서울지점 경영컨설팅/리서치 실장  
1994.07 – 1995.05 제일은행/국민은행 경제연구소 자문/연구위원  
1993.09 – 1994.07 서울대학교 국제경영연구소 객원연구원  
1991.02 – 1993.08 일본 대장성 산하 일본증권경제연구소 객원연구원  
(Scholarship & 연구기금 수상)  
1990.01 – 1990.12 일본 후지쯔종합연구소 금융시스템 개발 객원연구원  
(Scholarship & 연구기금 수상)



# 한국경제 긴급진단과 향후 정책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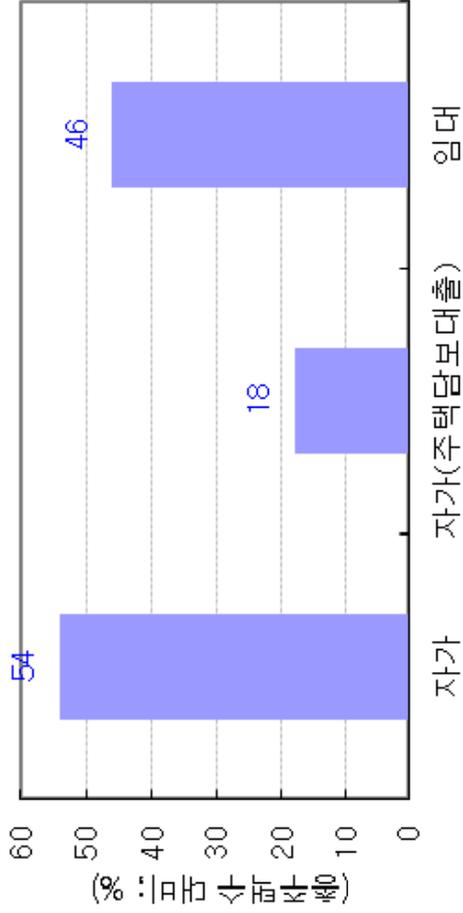
- 가계부채와 부동산시장 -

2012년 6월 21일

**Kseri** | 김광수경제연구소  
www.kseri.co.kr

# 국내 주택 시장 규모(2010) -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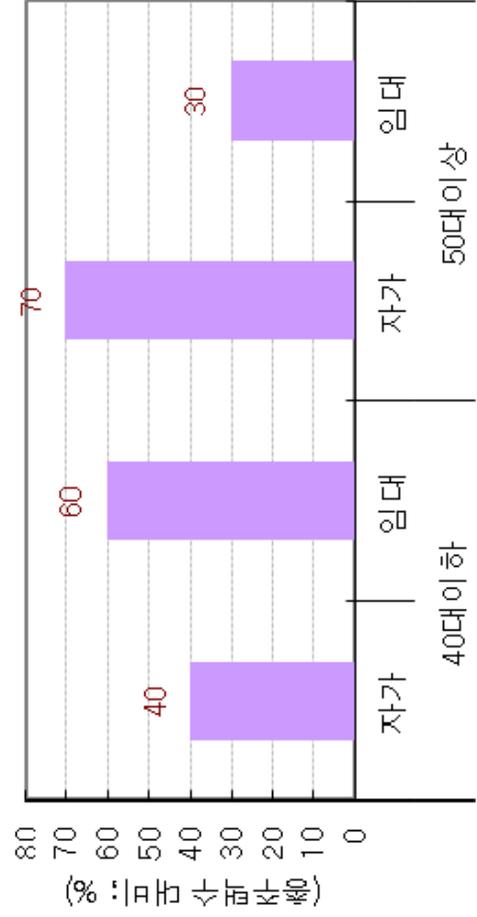
자가 및 임대 주택 비중(2010년)



(주택 점유형태별 분포)

자가 : 전국 54%  
(서울 41%, 경기 49%)  
임대 : 전국 46%  
(서울 59%, 경기 51%)  
주택담보대출을 임대로  
분류하면 65%에 달함

연령대별 자가주택 비중(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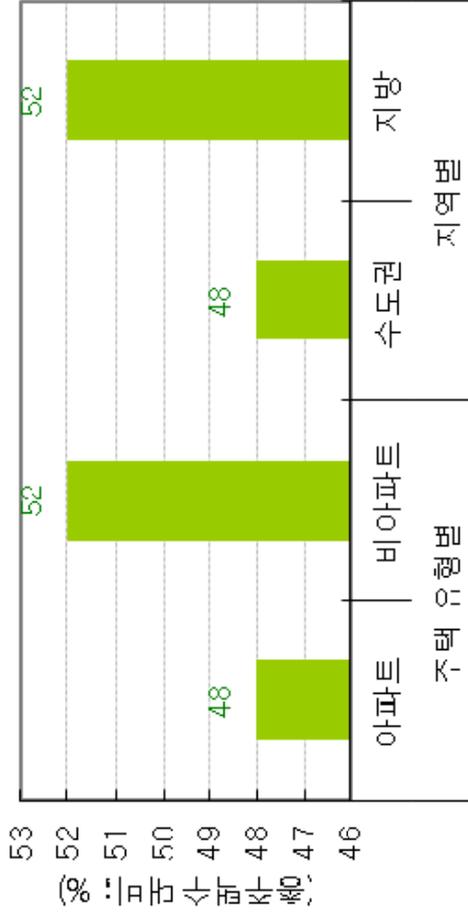


(자가 소유 연령대별 분포)

40대 이하 : 40%  
(무주택 비율 : 60%)  
50대 이상 : 70%  
(무주택 비율 : 30%)

# 국내 주택 시장 규모(2010) - 2

주택 분포 현황(2010년)



(아파트 분포)

- 아파트가 전체 주택의 48%
- 수도권과 지방이 거의 반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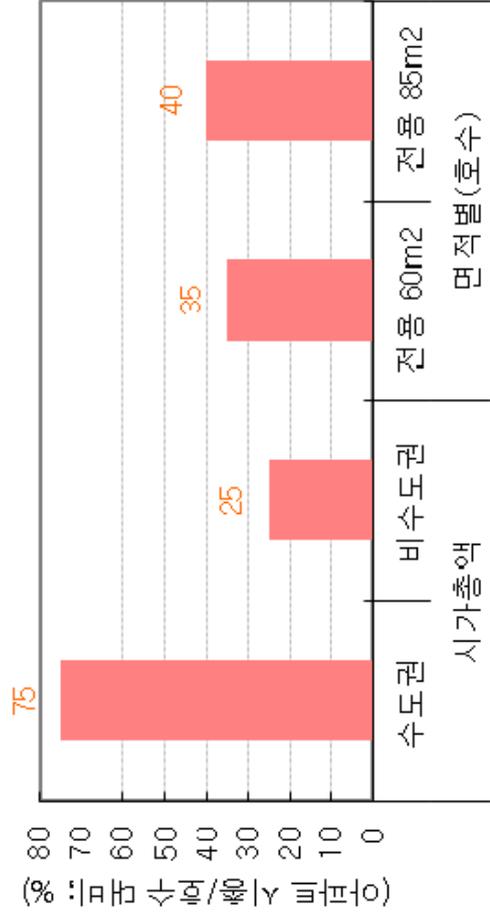
(아파트 시가총액 비중)

수도권이 전국 아파트 시총의 75% 이상을 차지

(아파트 면적별 분포)

- 전용면적 60m<sup>2</sup> : 전체 아파트의 35%를 차지
- 전용면적 85m<sup>2</sup> : 전체 아파트의 40%를 차지

아파트 시가총액 분포(2012년 2월 현재)



# 국내 주택 시장 동향(2012)

## (주택시장 현실)

- 수도권 지역 중심으로 2008년부터 아파트 가격 대세 하락세를 지속(별첨자료 2 참조)
- 특히 버블 세븐 중심인 강남을 비롯하여, 1기 신도시지역인 분당, 일산, 평촌, 산본 등은 2006년 초 수준까지 떨어진 상태임
- 2006-2012년 기간 동안 소비자물가는 22% 상승, 같은 기간 원/달러 환율도 20% 가량 상승
- 원화 화폐가치 하락을 감안할 경우 수도권 아파트 실질가격은 이미 2006년 이전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임

## (헛다리 짚은 주택정책)

- 노무현정부 : 부동산 투기 억제 실패(임대주택 공급 대신 신도시 개발 및 뉴타운사업 중심의 분양주택 공급정책 실시)
- 이명박정부 : 각종 토건사업 및 투기조장형의 분양책 남발했으나 정부 및 공기업 채무만 급증하고 분양 효과 없었음

## (정책 실패의 대가)

- 인구동태 및 자원배분 심각한 왜곡으로 저출산 및 성장잠재력 저하
- 건설사 연쇄 도산 - 저축은행 총체적 부실 - 가계부채 표면화
- 거품 붕괴 위험 및 장기 저성장의 늪에 빠지고 있음

# 국내 주택 시장은 회복 가능성이 있는가 ?

<p>주택시장은 경기 및 가계소득, 투기와 금융권의 자금공급, 가계부채, 물가 그리고 정부의 부동산정책 등에 영향을 받음</p>
<p>(대내외경제 여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럽 채무위기 악화로 경기침체 장기화, 중국 등 신흥경제국 경기 둔화 진행, 미국 경제 회복 둔화 우려 등 당분간 대외 경제여건 악화가 계속될 전망</li> <li>- 326조원에 달하는 최대 규모의 적자예산 편성에도 불구하고 경기 악화와 수출이 감소하는 등 대내 경제여건 역시 악화가 예상됨</li> </ul>
<p>(금융권 자금공급 형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사 연쇄 파산, 저축은행 부실, 가계부채 표면화, 주택가격 하락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기관도 부실 위험 및 과다대출에 노출된 상태로 자기도 급한 상황</li> </ul>
<p>(가계소득 상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내외 경기 위축으로 가계소득도 위축, 또 물가 및 환율 상승 등으로 화폐가치 하락에 따른 실질 가계소득은 줄고 있는 상태임</li> <li>- 특히 자금순환표상의 가계 금융부채는 1,100조원으로, 이는 명목가처분소득의 170%에 달함(금융권의 가계대출은 910조원으로 명목 가처분소득의 140%에 달함)</li> </ul>
<p>(해외 거품붕괴 사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 미국, 유럽의 선진국들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의 거품 붕괴를 막지 못하고 경제 혼란과 장기침체에 빠졌음</li> <li>- 한국이라고 예외는 아닐 것임</li> </ul>

# 국내 주택시장이 거품이 붕괴된다면?

결론적으로,

- 한국의 주택시장은 거품이 붕괴될 위험에 직면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 부동산 투기거품으로 인해 한국경제는 막대한 기회비용을 치르고 있으며, 앞으로도 장기간에 걸쳐 유무형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

(거품붕괴를 막을 수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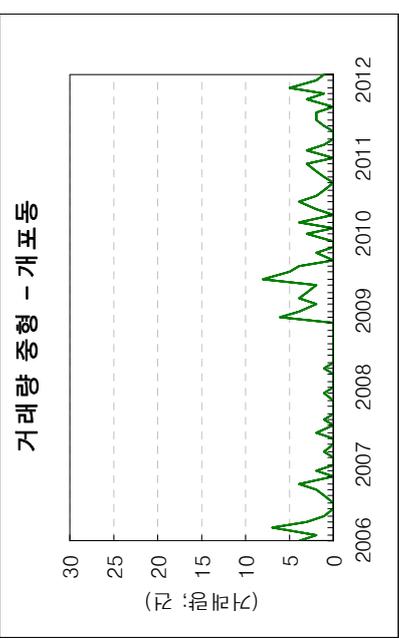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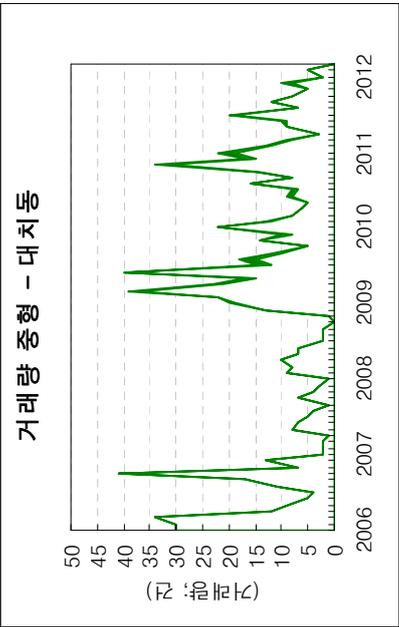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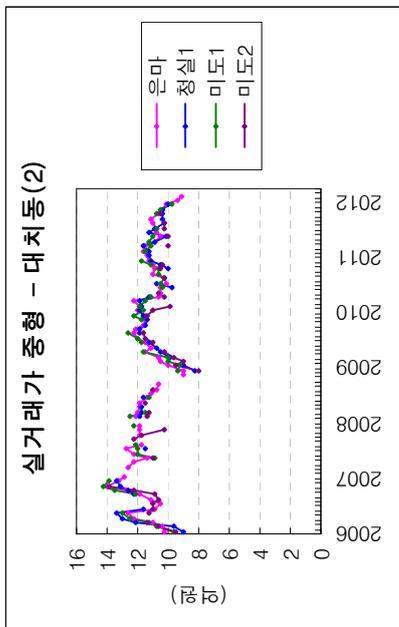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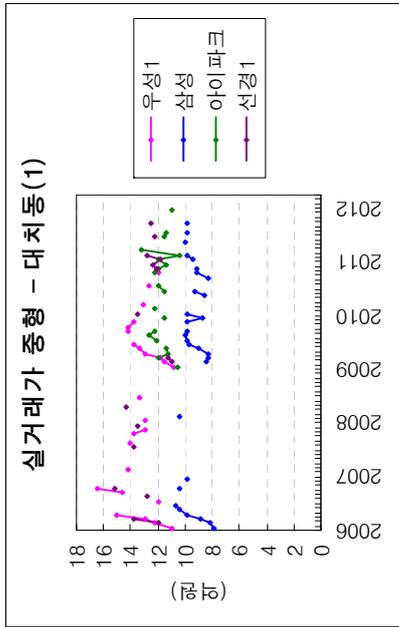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동산 투기거품 붕괴를 막는데 성공한 나라는 없음
- 이미 지난 2001년 이후 투기거품 발생에서 한국경제 전체로 გადა채무 상태에 빠져 있음
- 이명박정부가 거품붕괴를 막기 위해 지난 5년 동안 온갖 부양책을 실시했으나 결과는 거품이 꺼지는 것을 막지 못한 채 정부와 공기업 등 공적부문의 채무만 급증하였음

(어떻게 할 것인가)

- 효과가 없는 무리한 부양책 남발은 오히려 정책수단 고갈만을 초래할 뿐
- 자원배분과 경제 전체를 왜곡한 부동산 투기거품은 자연스럽게 꺼지도록 놔두는 것이 필요
- 우선 가능한 한 가계부채를 최대한 줄이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
- 부동산시장 거품 붕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혼란에 대비하여 부실채권 정리 및 건설업 등 산업구조조정, 사회안전망 강화 등 필요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

# (별첨 자료 1)

## 서울 강남구 - 중형(85m<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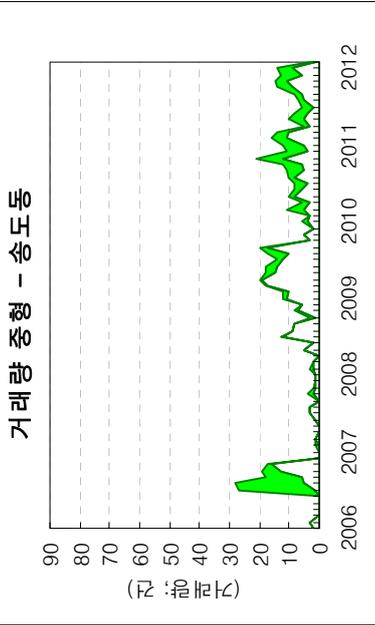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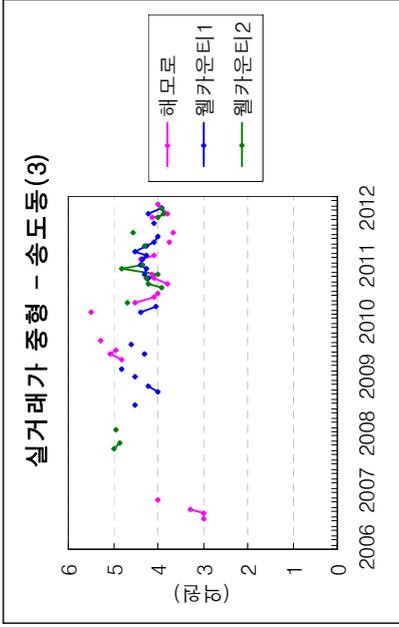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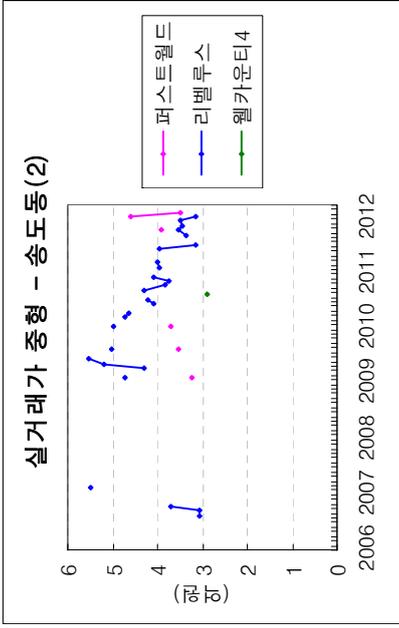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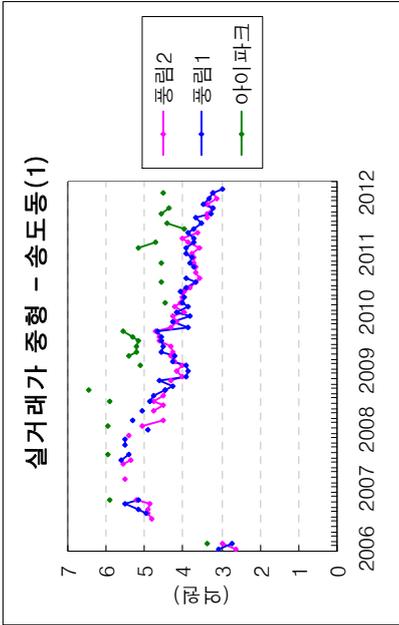


**(대치동)**  
 - 재건축 투기 대상인 은마와 청실1단지를 중심으로 거래가 대부분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2011년부터 거래가 급감하고 있음  
 - 재건축 사업성 문제가 표면화되면서 가격 하락세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2007년 초에 비해 최대 5억원 가량 하락한 상태이며, 하락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개포동)**  
 - 재건축 투기로 가격이 폭등하고 거래도 거의 없는 가운데 재건축 사업성 문제가 표면화되면서 가격 하락세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2007년 초 13억원 가량에서 올 2월에는 9억원 밑으로 떨어지고 있으며 하락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주) <부동산보고서>, KSERI

인천 연수구 - 중형(85m<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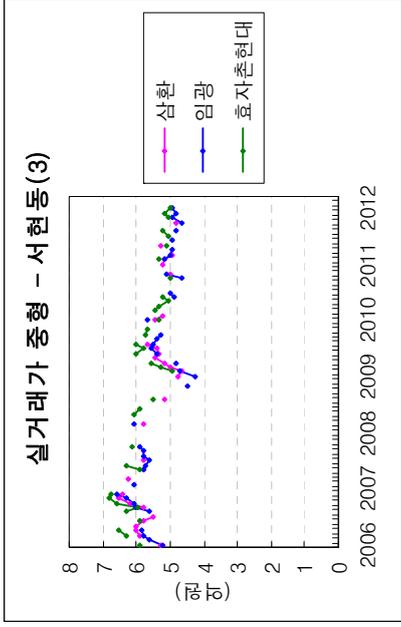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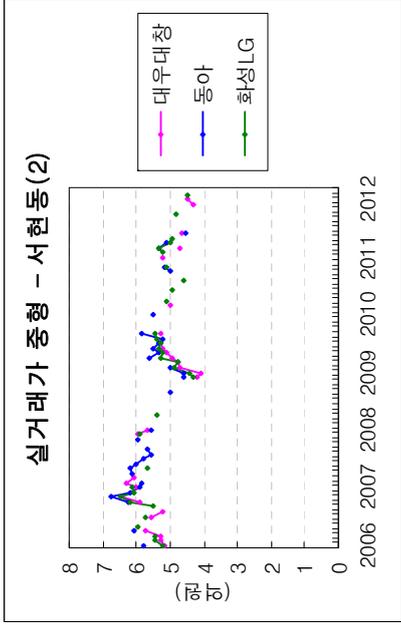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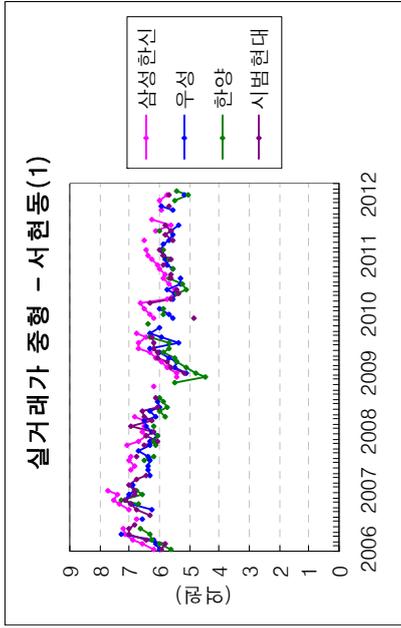


**(송도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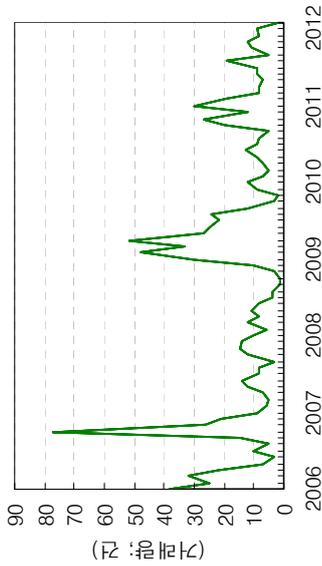
- 거래는 2006년에 한진해모로 신규입주로 거래가 일시 증가했으나 이후 소멸됐음. 2009년에 다시 급증한 후 2010년부터 감소한 가운데, 주로 품림1,2를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
- 가격은 2008년부터 하락세 속에 고집대비 품림은 3억원, 아이파크는 2억원, 리벨루스 2.5억원, 헤모로 1.5억원, 웰카운티1,2는 1억원 가량 하락했음

(주) <부동산정보고서>, KSERI

성남시 분당구 - 중형(85m<sup>2</sup>)



거래량 중형 - 서현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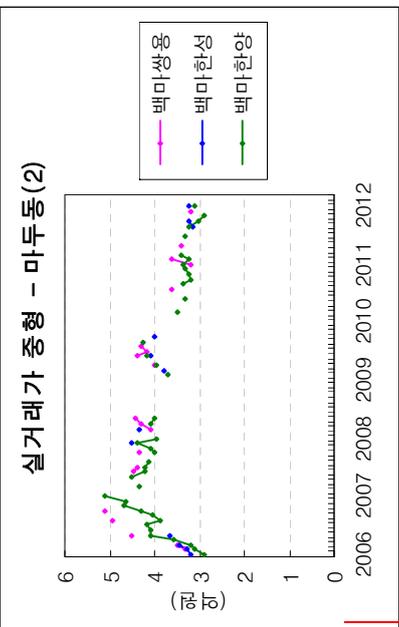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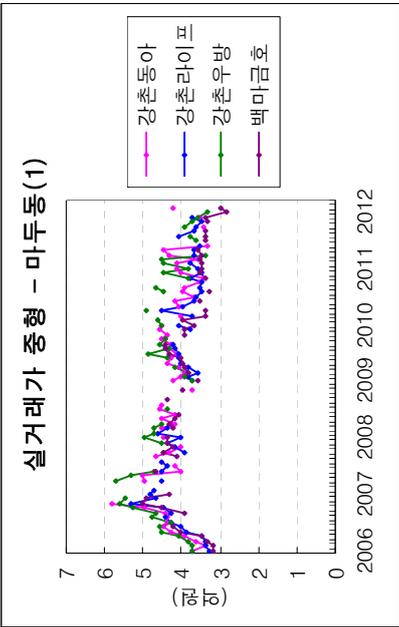


(주) <부동산보고서>, KSERI

(서현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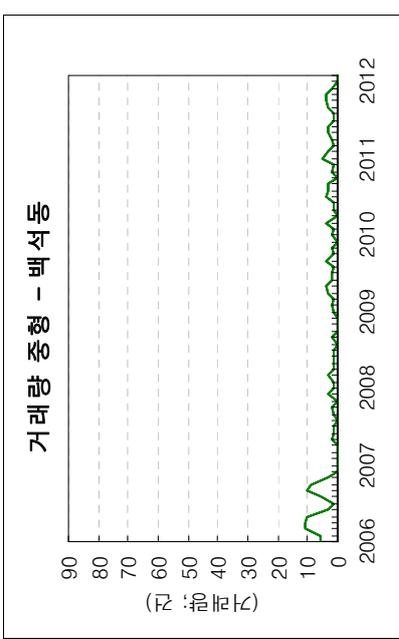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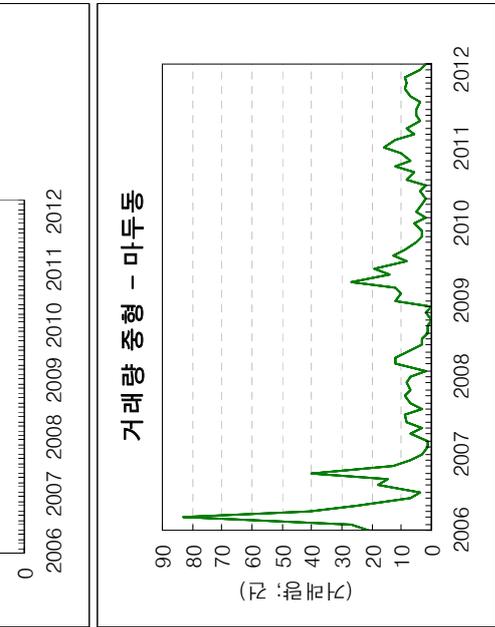
- 거래는 2010년에 급감한 상태로, 주로 시범단지인 삼성한신, 우성, 현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가격은 2007년부터 하락세 속에 고점대비 1.5-2억 원 가량 하락한 모습이며, 2006년 가격수준보다 더 떨어진 상태임

고양시 일산동구 - 증형(85m<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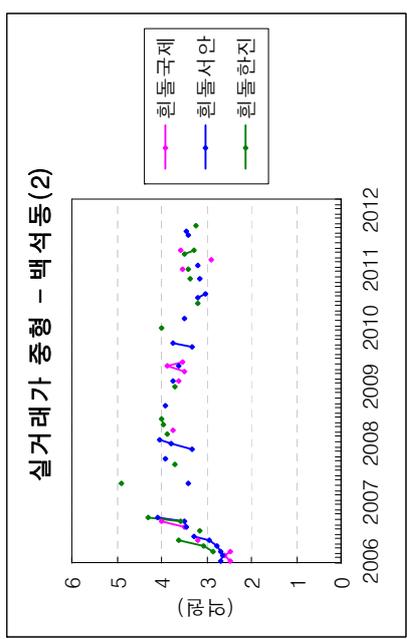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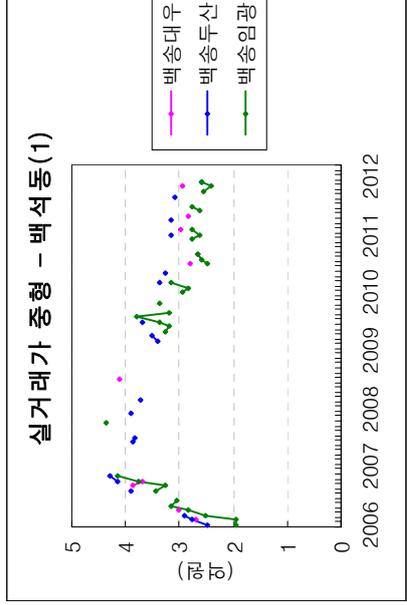
**(백석동)**

- 2007년부터 거래가 거의 소멸된 가운데, 단지별로 간헐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
- 가격은 2007년부터 하락세 속에 고점대비 1-1.5억원 가량 하락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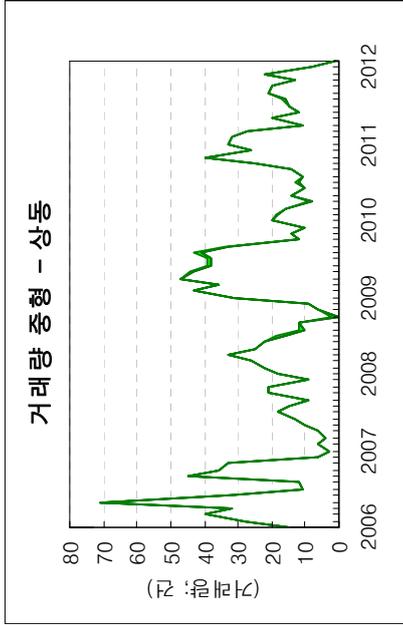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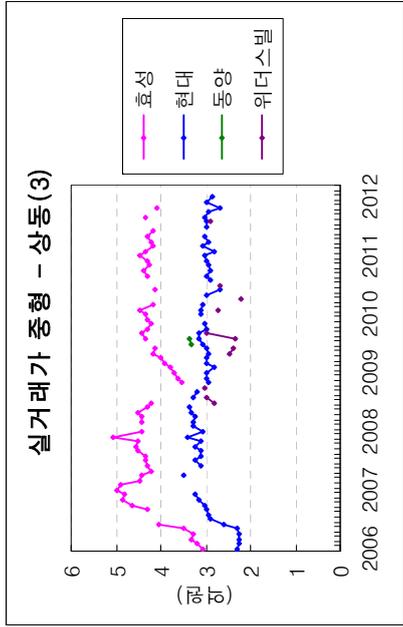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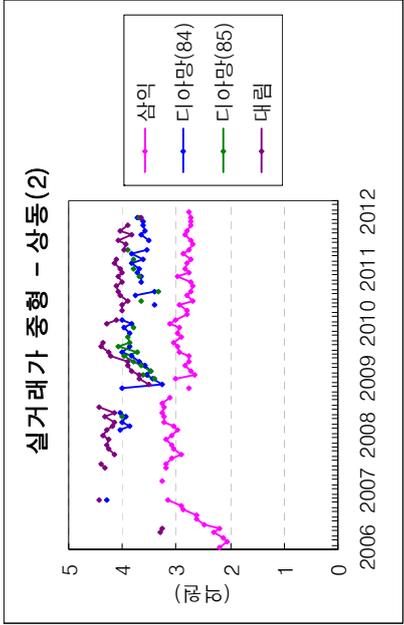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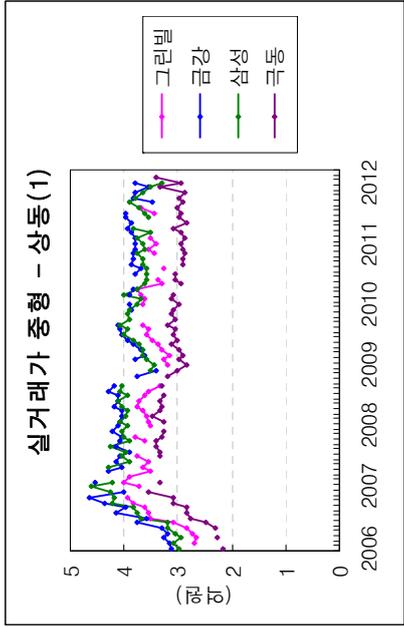
**(마두동)**

- 2009년에 일시적으로 거래가 늘었으나 이후 다시 감소하였으며 올 들어서는 거의 실종되고 있음. 백마쌍용은 거래가 거의 없음
- 가격은 2007년부터 하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고점 대비 1.5-2억원 가량 하락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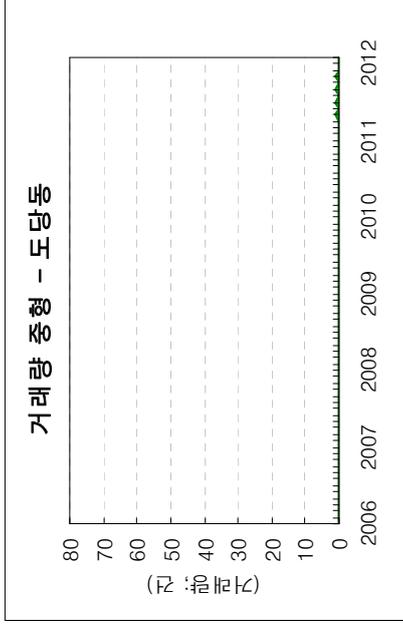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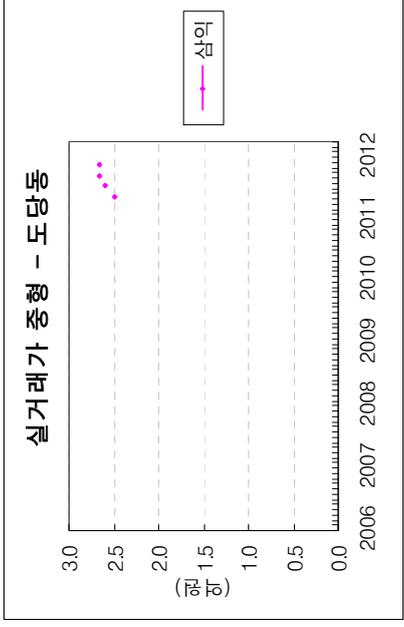
(주) <부동산정보고서>, KSERI

부천시 원미구 - 중형(85m<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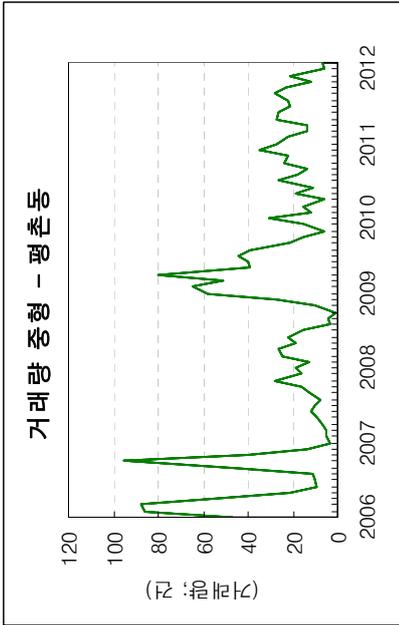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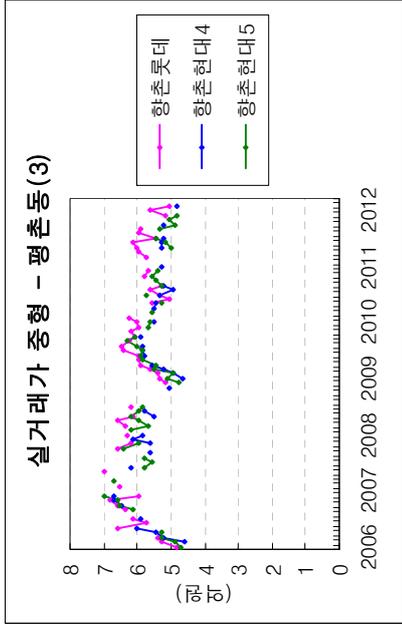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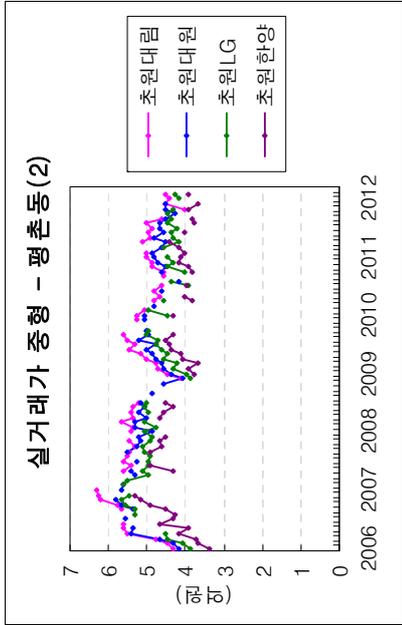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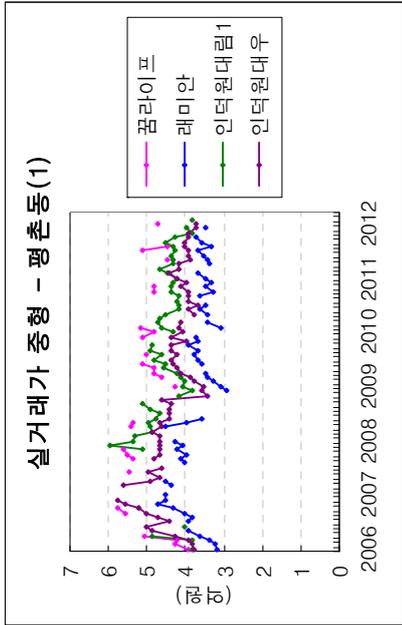
(주) <부동산정보고서>, KSERI

**(상동)**  
 - 거래는 2008년과 2009년 그리고 2011년 전후로 부동산 부양책 발표로 거래가 급증하였으나 곧바로 소멸된 모습으로, 특히 울들어 거래가 거의 소멸되고 있음. 동양과 위더스빌은 거래가 거의 없음  
 - 가격은 2007년부터 하락세 속에 고점 대비 5천만-1억 원 가량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도당동)**  
 - 거래가 거의 없음

안양시 - 중형(85m<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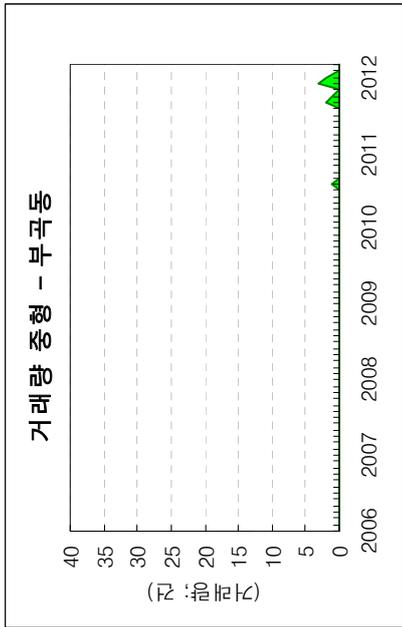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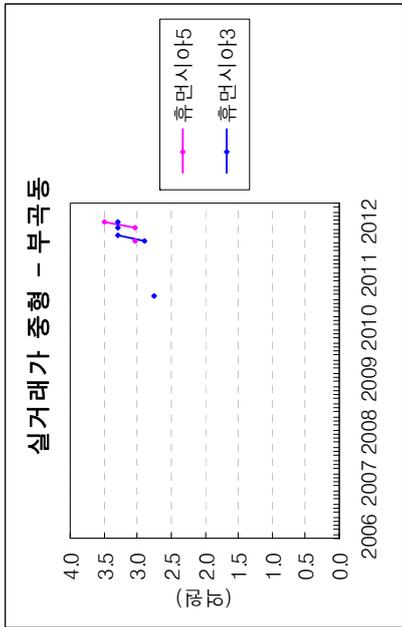


거래량 중형 - 평균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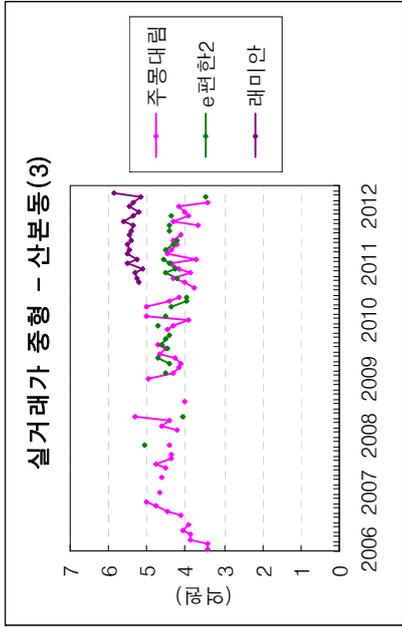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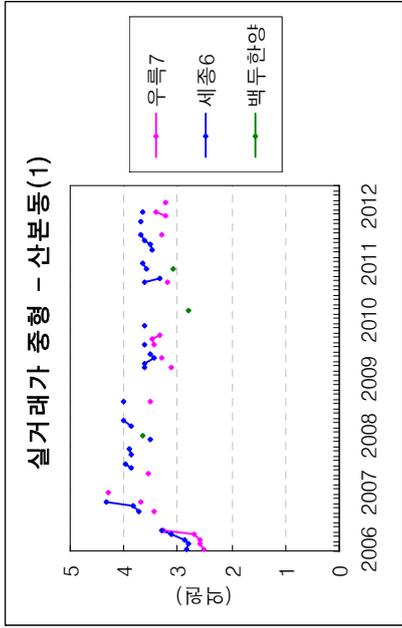
(주) <부동산보교서>, KSERI

**(평균동)**  
 - 거래는 2009년에 급증한 후 급감했으며 울 들어서  
 는 거의 소멸되고 있음. 주로 인덕원대우와 인덕원대  
 림1, 초원대림, 초원대원, 래미안 등을 중심으로 이루  
 어지고 있음  
 - 가격은 2007년 이후 하락세 속에 고점대비 1-2억원  
 가량 하락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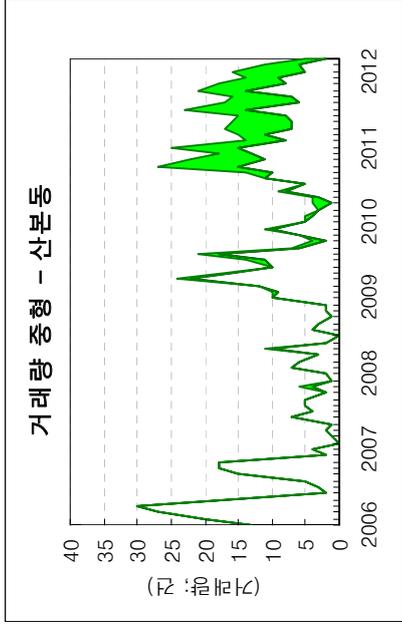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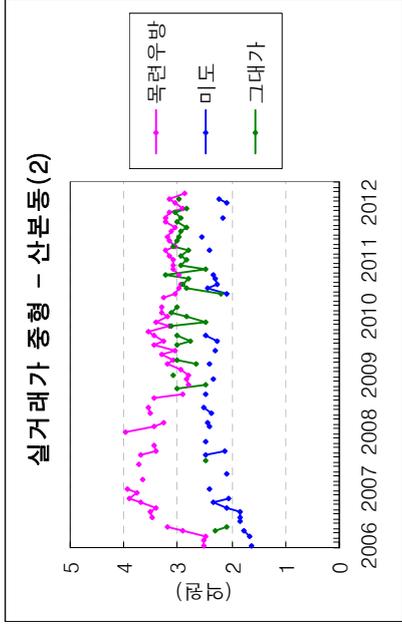
군포시 - 중형(85m<sup>2</sup>)



(부곡동)  
- 임주 후 거래가 거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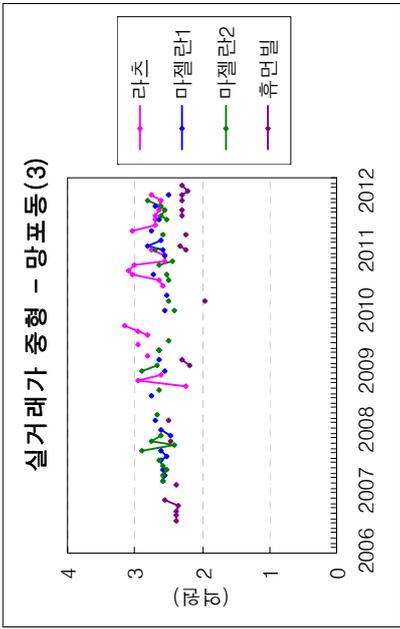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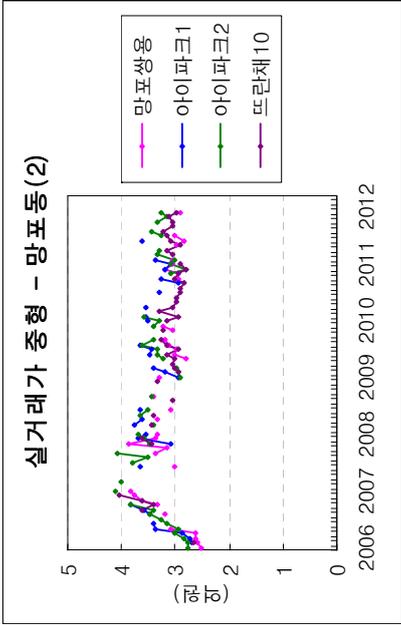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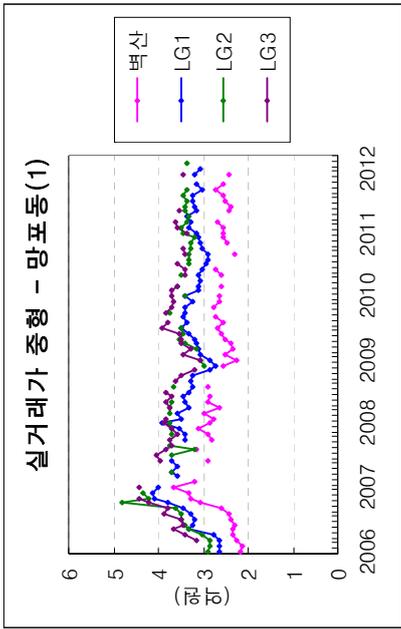


(산본동)  
- 거래는 주로 목련우방, 주몽대림, 래미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울타어 거래가 감소하고 있음  
- 가격은 거래가 있는 단지를 중심으로 2006년에 1-1.5억원 가량 오른 후 다시 5천만-1억원 가량 하락한 모습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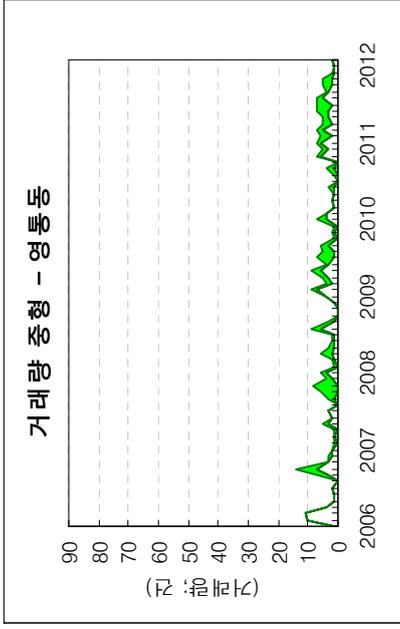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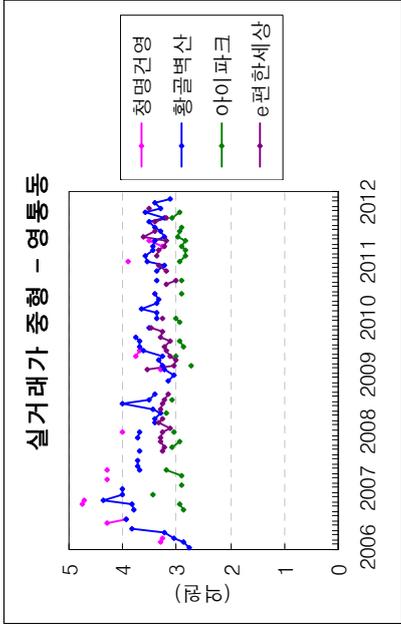
(주) <부동산고서>, KSERI

수원시 영통구 - 중형(85m<sup>2</sup>)



**(망포동)**

- 거래는 2011년부터 급감한 가운데 올 들어 거의 소멸되고 있음
- 가격은 2006년 이전 입주단지들은 2007년부터 하락세 속에 고점대비 1억원 하락했으며, 라즈, 마젤란, 휴먼빌의 2006년 이후 입주단지들은 고점대비 5천만원 가량 하락한 모습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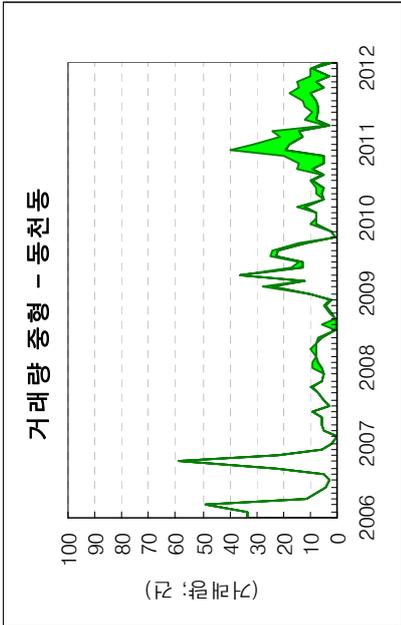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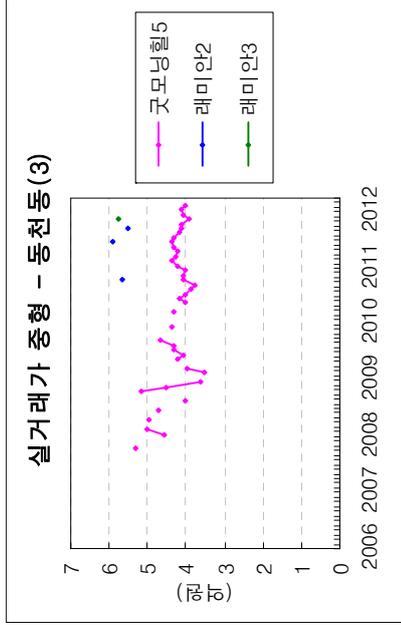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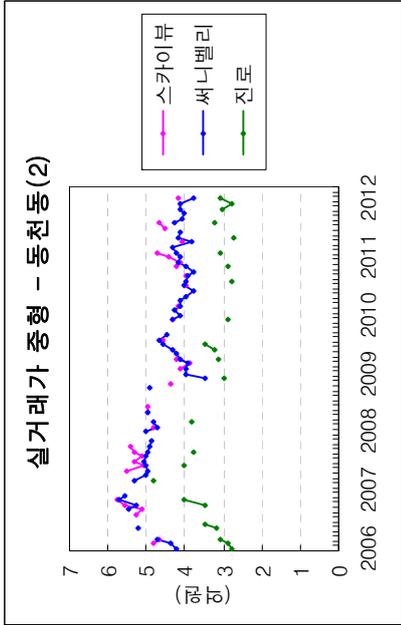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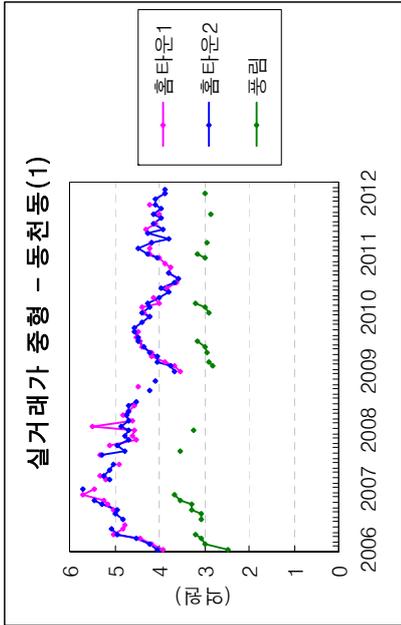


**(영통동)**

- 거래는 올 들어 거의 소멸된 가운데, 청명건설은 거래가 거의 없음
- 가격은 건영과 벽산은 2007년부터 하락세 속에 고점대비 1억원 가량 하락한 모습이며, 2006년 이후 입주한 아이파크와 e편한세상은 회복 양상임

(주) <부동산정보고서>, KSER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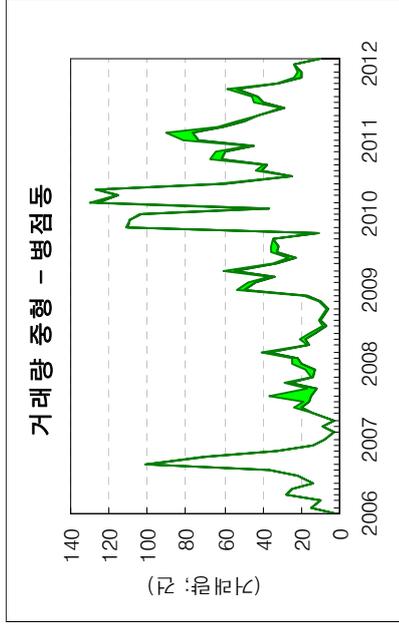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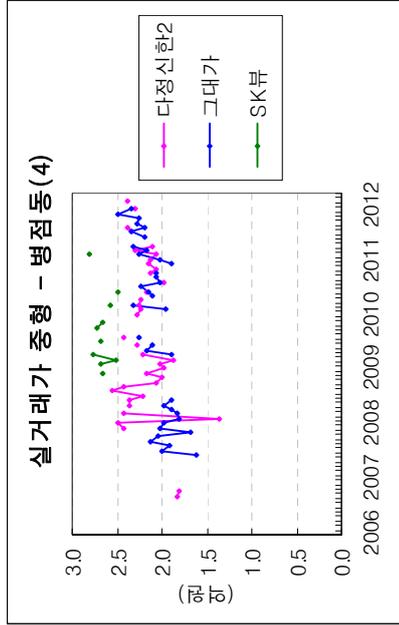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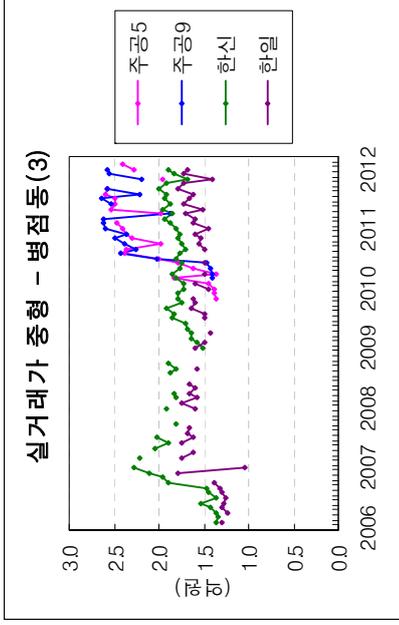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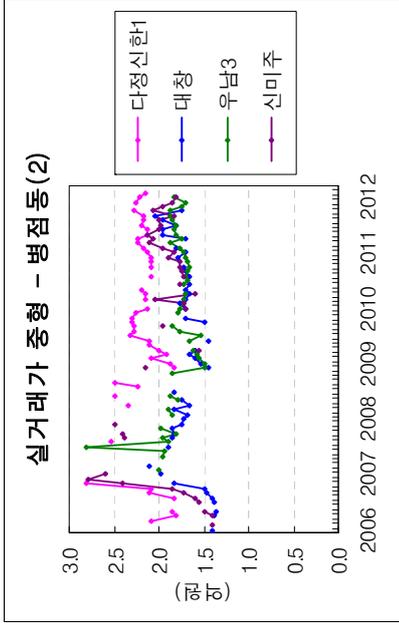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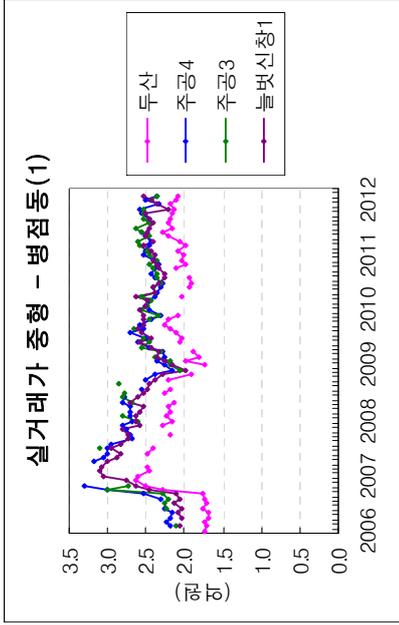
용인시 수지구 - 중형(85m<sup>2</sup>)



(주) <부동산정보고서>, KSERI

**(동천동)**  
 - 거래는 홀타운1,2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울타어 침체되고 있음  
 - 가격은 2007년부터 하락세 속에 고점대비 1-2억원 가량 하락한 모습임

화성시 - 중형(85m<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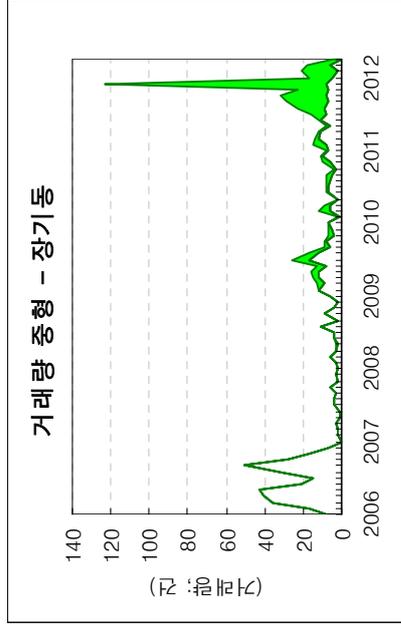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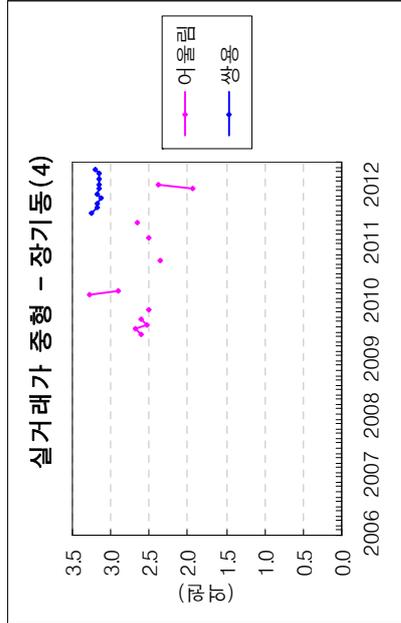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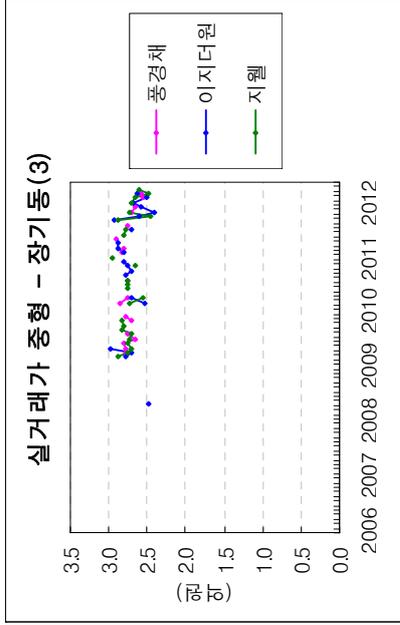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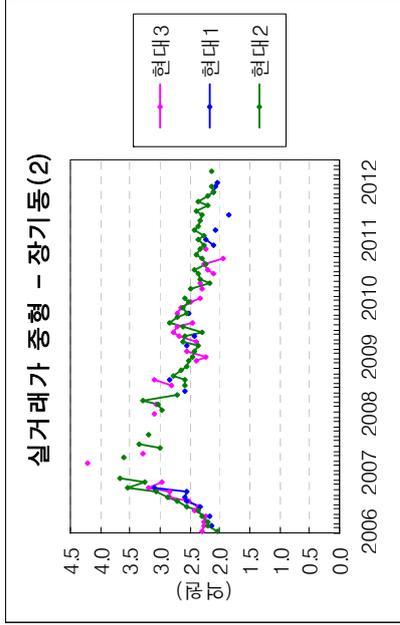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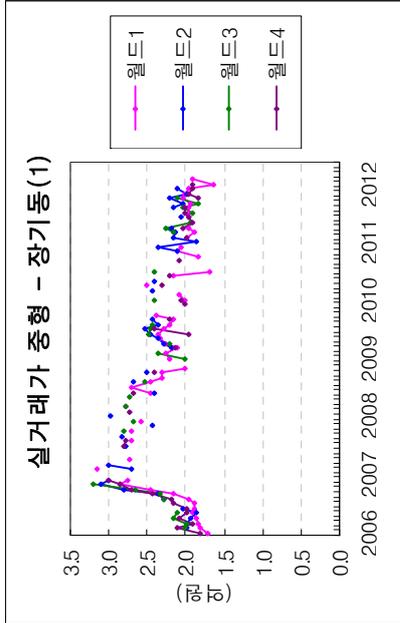


(병점동)

- 거래는 2010년에 주공5,9차가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되면서 거래가 급증한 것처럼 보임. 울 들어 거래가 급감한 상태임
- 가격은 2006년 이전 입주단지인 2007년 이후 하락세 속에 고점대비 5천만원 가량 하락한 후 회복세인 반면, 2006년 이후 입주단지인 대체로 회복 양상임

(주) <부동산정보교서>, KSERI

김포시 - 중형(85m<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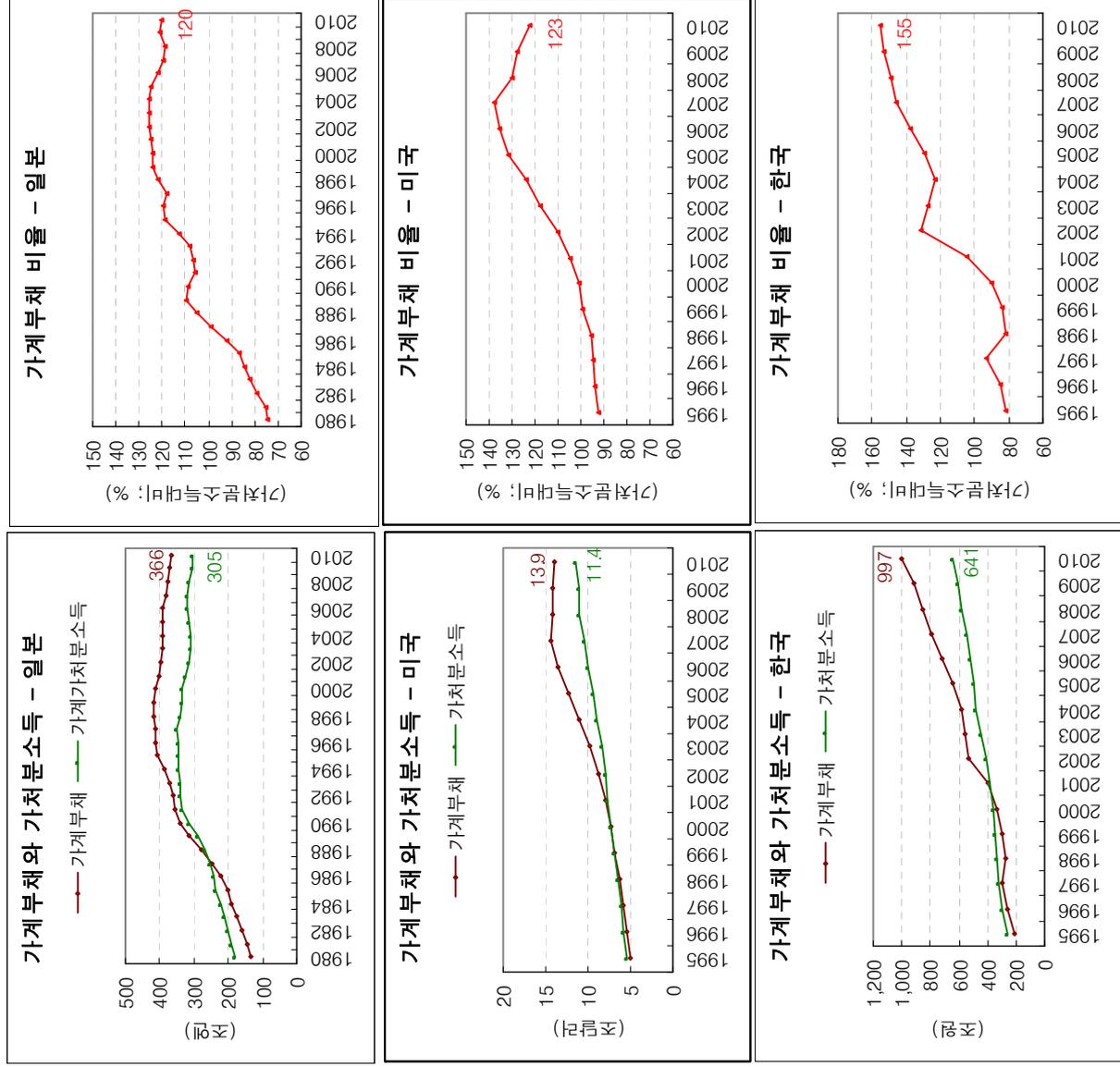


(장기동)

- 2011년에 자연엔어울림이 미분양 처리로 보이는 전매거래가 일시 급증한 것처럼 보임. 거래는 주로 현대 2-3, 월드1, 쌍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가격은 2006년에 1억원 이상 오른 후 2007년부터 하락세 속에 1억원 이상 떨어져 2006년 초 수준보다 더 낮은 상태임. 2006년 이후 임주단지도 하락세 양상인 가운데, 어울림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주) <부동산보고서>, KSERI



(주) 각종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2002년 이전의 한국 가계부채는 68SNA에 의한 것임.